

발간등록번호

34-9761218-230003-09



ISSN 2287-5212(Print)
ISSN 2765-3129(Online)

선거연구

The Study of Election

제18호 | 2023



公明選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차례



- 중선거구제와 제3정당의 생존: 5
제4~8회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 박상훈 · 이재훈

- 청소년 유권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33
정치정보 수집 및 투표 경험 탐색 | 이지영 · 손다정 · 김아미

- 선거 여론조사 뉴스 리터러시 향상 방안 도출을 위한 71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도 내용분석 | 정일권 · 진보래

CONTENTS



- Multi-Member District and Survival of the Third Party: 5
The Cases between the 4th and 8th Korean Local Elections
| Park, Sanghoon · Lee, Chae-Hoon

- Exploration on First Time Voters' Political Information Gathering 33
and Voting Experience in the 20th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 Lee, Jee Young · Sohn, Dajung · Kim, Amie

- News Coverage of Polls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Campaign in Korea: 71
A News Literacy Approach
| Jeong, Irkwon · Jin, Borae

중선거구제와 제3정당의 생존: 제4~8회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박상훈 | 미국 사우스캐롤라니아주립대학교

이재훈 |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 국문요약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내년 총선 게임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언급했다. 본 연구는 중선거구제를 16년간 실시해 온 지방의회 기초의원선거를 분석하여 국회의원 총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 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혹은 지방선거에서의 문제가 재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사표의 비율은 감소한다. 둘째,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수가 증가한다. 셋째, 하지만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지역 패권 정당 후보자의 당선 예측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예측확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간의 기초회의의원 시군구 선거에서는 일관된 기호효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기대한 효과보다는 지방선거의 기초회의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중선거구제 도입 시 지역 패권 정당의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당내 경쟁 및 파벌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제어 | 중선거구제, 지역 패권 정당, 제3정당, 기초회의의원선거, 기호효과

* 연구의 과정 중에 많은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재복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 서론

2022년 12월 30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해 선거가 과열되어 좌우 간 진영 양극화 문제 및 사회 균열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조선일보 2023). 이후 정치권에서 2024년의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대선거구제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과 함께 지역구도 타파 등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11일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개방명부식 대선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 개편안 3가지를 안건으로 의원 간 토론이 진행되었고, 2023년 5월 중순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한국일보 2023; SBS 2023; YTN 2023).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의 논의가 대두될 때마다, 언론 학계 할 것 없이 기존의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외국의 선거제도 사례(매일경제 2023; 서울신문 2023) 혹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거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지형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해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김종갑·신두철 2014; 시사저널 2019; 신명숙 2000; 한겨레21 2021). 하지만 한국에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둘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가장 최근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총 5회 동안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2~5인에 이르는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시행한 바 있다. 통상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 내에서 2~4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중대선거구제 내에서도 선거구의 규모에 따라 중선거구제와 대선선거구제로 구분하는데 한국 지방의회 기초의원선거에서 사용되는 선거구제의 경우 2~5인 선거구라는 점에서 중선거구제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거 수준(tier)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 16년에 걸친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대한 분석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잠재적 문제점 등을 살펴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선거

구의 총 투표수 대비 낙선자들의 득표수 비율은 감소한다. 즉, 선거구 크기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견인한다. 둘째,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수가 증가한다. 이는 지역 패권 정당 소속 후보자와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셋째, 하지만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지역 패권 정당 소속 후보자의 당선 예측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예측확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사표 감소 효과 또는 후보자 유인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제3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같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시, 기호효과와 순서효과 등으로 인하여 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벌화와 같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II. 이론적 논의

1. 선거구 크기의 효과

선거제도(electoral system)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의석배분방식(electoral formula)과 선거구 규모(district magnitude)가 상이한 선거 결과를 견인하는 제도적 요인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Riker 1962; Shugart and Taagepera 2018; Taagepera and Shugart 1989).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와 다수제 원칙(majoritarian rule)을 따르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낮추어 유권자들이 진실로 지지하는 정당보다 승산이 높은 정당에 투표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제와 그에 따라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두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정당 체계를 재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보다 큰 선거구를 갖는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의 경우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거나, 유권자들에게 한 명 이상의 당선자라는 가능성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여러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다당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많은 후속 연구들은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정당 체계의 파편화 정도가 심화된다는

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며 뒤베르제의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다(Abramson et al. 2010; Neto and Cox 1997; Ordeshook and Shvetsova 1994; Raymond 2017; Singer and Stephenson 2009; Taagepera and Shugart 1989).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선거구 크기의 효과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Raymond 2017). 예를 들어, 중선거구 혹은 대선선거구라고 하더라도 의석 배분방식이 다수제인지 여부에 따라서 선거구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Raymond 2017, 324), 선거구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에는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Cox 1997). 즉, 선거구의 크기가 소선거구보단 크지만 대선선거구보다는 작은 중선거구의 경우에는 선거구 크기에 따른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유인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Abramson et al. 2010, 64).

한편으로 선거구 크기가 독립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Lipset, and Rokkan 1967; Neto and Cox 1997; Zielinski 2002). 선거구 크기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인종 혹은 종교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선거 결과에 투영되는, 선거구 크기의 혜택을 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선거구 크기가 선거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선거구 크기의 효과가 공간적 범주 또는 다른 제도 및 사회적 요인의 조건 하에서도 일관되고 동질적인가(consistent and homogeneous)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교차 사례 또는 시계열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Abramson et al. 2010; Geys 2006; Raymond 2017).

2. 한국의 선거제도와 중선거구제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단순다수제를 기초로 일부 비례대표제도가 가미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의 국회의 의원정수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전국 지자체의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으로 정해져있다. 현행 국회의원 총선거를 둘러싸고 불비례성과 지역주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강원택 2009; 김형철 2017; 김종갑 · 이정진 2020; 참여연대 2020).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모습의 소선거구제 선거법이 확정되었다. 이후 지난 35년간 현행 선거제도는 지지부진한 개편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도농복합선거구제(농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를 제안하기도 했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한겨레 2023).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한다는 명목 하에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행태가 유지되고 있었고(차재권 외 2020), 위성정당 등장으로 인해 불비례성 문제 해결도 해소되지 못했다(이정섭 외 2020, BBC 2023).

기존 연구들은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의 원인을 거대양당체제에서 찾고 있으며, 그러한 정당 구조를 만들어내는 유인으로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지적해왔다. 따라서 일련의 연구들은 소선거구제로부터 2인 이상의 당선자를 한 지역구에서 선출하도록 선거구의 크기를 조정할 경우,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정당 체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안승국 2010, 장훈 2012, 정준표 2014, 김만홍 2011). 실제로 2022년 12월 30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점인 진영 양극화와 같은 균열 심화의 문제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한 것(조선일보, 2023)은 선거구 규모가 선거 결과를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이해를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연 현재 한국의 양당 중심의 정당 구도와 양극화된 정치지형이 소선거구제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제까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와 상대적으로 적은 비례대표 의석을 결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이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국의 선거제도의 의석결정방식을 한국의 기존 선거 결과에 대입하여 선거 결과의 변화를 예상해보거나(매일경제 2023; 서울신문 2023), 도입 가능한 제도들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해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김종갑·신두철 2014; 시사저널 2019; 신명순 2000; 한겨레 2021).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들은 다른 유형의 선거제도에 대입하여 결과를 추산하더라도 한국의 정치지형 속에서 이루어진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그러한 변화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하에서 전략적 투표를 수행한 유권자들의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들에 대한 표를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 상황을 가정하여 재분

배한 뒤, 그로 인한 결과의 변화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투표행태를 견인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제도 도입의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하기 어렵다. 나아가 각 선거는 특정한 시점의 정치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어진 결과들에서 선거구 규모라는 변수를 소선거구제로부터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로 대체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논의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3. 한국의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와 중선거구제

본 연구는 한국의 제도적 및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면서도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의 선거제도로부터 벗어난 사례로 지방선거 기초의회의 시군구 선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최근의 2022년의 제8회 동시지방선거 동안 한국은 기초의원에게 대한 정당 공천제와 한 선거구에서 2~5인에 이르는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해 왔다(이재훈·고선규 2014). 비록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는 선출 대상에 있어서 층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국의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그리고 정당 공천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당의 지방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해볼 때(황아란 2010), 지방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도입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 또는 이론적으로 다른 제도의 운용 방식을 이용해 기존 선거 결과를 재현하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제도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잠재적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의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는 단순다수제와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결합된 형태이다. 즉, 유권자들은 시군구 선거에서 정당명부가 아닌 후보들에게 직접 투표하고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 순대로 선거구 크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조성대 2010, 118). 2006년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중선거구제 도입은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안철현 2011). 첫째, 득표율과 의석률 간 비례성이 제고되는지, 둘째 소수파가 원내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지,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표가 가능한 선거 결과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사표 감소를 통한 대표성 제고가 나타나는지이다.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다. 김순은(2010)은 2006년 선거와 2010년 선거의 기초의회 제1당 의석점유율을 비교하여 중선거구제가 지역주의

와 정당독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영태(2011)는 중선거구제는 지역 정당구조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구 크기를 더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철현(2011)은 중선거구제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과 같은 소수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지만 지역주의와 정당독점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조성대(2010)는 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군소정당이나 여성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의 원내 진입에 장애가 되며, 오히려 선거구의 크기에 주요 양당이 혜택을 보면서 사표 감소에 따른 대표성 증진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김정도(2012) 역시 지역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영호남 지역에서 선거구의 크기가 증가하더라도 유효 정당수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주요 양당의 독점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III. 연구가설

중선거구제 도입은 선거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지율이 높은 거대양당이 누리던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제3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정한(정준표 2010, 354). 하지만 선거구 크기의 효과가 독립적일 뿐 아니라 사회 내 주요한 균열들과 상호작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Neto and Cox 1997), 의석배분방식이 단순다수제에 가까울수록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당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Raymond 2017)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에 지속되어 온 주요한 사회적 균열은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세대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08). 하지만 엄밀하게 이 세 균열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다. 한국의 조건에서 영남 지역주의는 이념적으로 보수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호남 지역주의는 진보와 관계되어 있으며, 세대에 있어서도 이념적 균열이 상당

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이다(허석재 2019).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종이나 종교와 같은 균열 정도가 적고 높은 사회적인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다양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실재하는 것인지,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제의 의석배분방식의 영향 하에서 기대한 다당제로의 개편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선거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크기보다 더 많은 수의 후보자가 출마할 수 있으며 이는 더 폭넓은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와 과실이 기대한 대로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구 크기를 확대하였을 경우, 사표는 감소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거대 정당의 독점 구조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조성대 2010; 김정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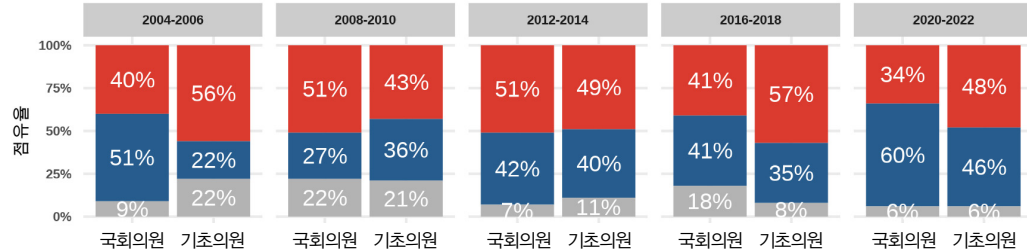
〈그림 1〉은 2004년부터 2022년 사이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그 직후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와 비례대표선거 각각의 총의석에 대한 주요 지역(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후보들이 차지한 의석과 그 외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의 의석 비율을 도식화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기초의원선거를 비교함으로써 두 선거의 층위 또는 선거제도의 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예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오현주 외 2014).

지역 패권 정당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집권 경험 혹은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한 경험이 있는 정당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1〉에서 영남 기반 정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을, 호남 기반 정당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포함한다.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5인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 5인 선거구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림 1〉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지역 패권 정당들 간의 의석점유율에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지역 패권 정당과 그 외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 간의 의석 점유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기초의원선거 모두에서 지역 패권 정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기초의원선거를 살펴보았을 때, 두 선거는 층위가 다르고 주요 선거제도(선거구 크기)도 다르지만 지역 패권 정당의 의석 독점이라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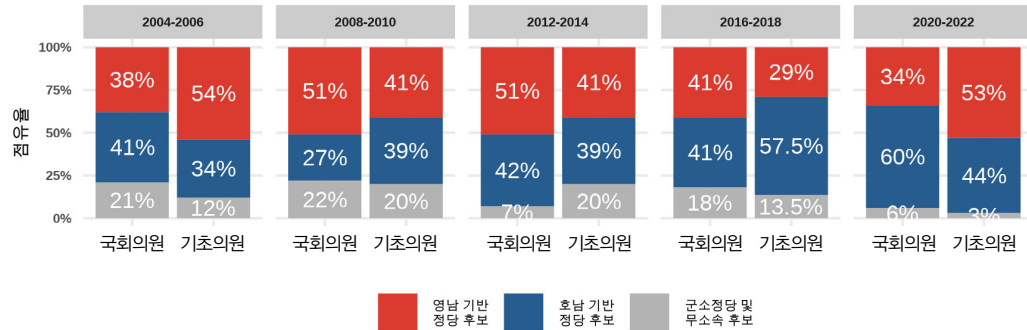
〈그림 1〉 국회의원/기초의원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 패권 정당 편향성

지역 선거구



비고: 국회의원 총선거와 기초의원선거 선거구 총의석에서 주요 지역 기반 정당 후보자가 차지한 의석과 기타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의석 비율을 나타내었다. 영남 기반 정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며, 호남 기반 정당은 열린우리당, 민주당(2006년 제외),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다.

비례대표



비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총의석에서 주요 지역 기반 정당 후보자가 차지한 의석과 기타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의석 비율을 나타내었다. 영남 기반 정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며, 호남 기반 정당은 열린우리당, 민주당(2006년 제외),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을 때, 과연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가능한 가설들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가설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선거구 크기를 증가시킴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선거 결과의 대표성에 관한 것이다.

[가설 1] 선거구 크기가 증가할수록 사표율이 감소하여, 선거 결과의 대표성이 증가할 것이다.

중선거구제는 유권자들에게 대안적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후보자들에게도 출마의 유인을 제공한다. 소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후보자들은 누가 출마할 것

인지, 누가 당선에 유력한지에 대해 낮은 정보 비용을 가진다. 따라서 본인이 당선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출마를 지양할 것이다. 하지만 중선거구제는 여러 명의 당선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누가 유력한 당선 후보자인지, 그리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 후보들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지 열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Hsieh and Niemi 1999). 이러한 정보의 문제는 선거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욱 후보자들이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구 크기와 선거구의 출마 후보자 수에 대한 두 번째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선거구 크기가 증가할수록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 크기가 증가하더라도 2인에서 5인 사이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다수제 방식의 현행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다. 즉, 중선거구제는 사표를 감소시켜 선거 결과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후보들이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며 출마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 도입에 따라 기대하는 지역주의 타파 또는 정당 독점의 완화, 그리고 군소정당의 약진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설 3] 선거구 크기가 증가할수록 주요 거대 정당 소속 후보자에 비해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더 낮을 것이다.

IV. 경험 분석

1. 연구 자료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4~8회 지방선거(2006~2022년)까지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분석 단위는 선거구 단위와 후보자 단위로 한국의 2006년과 2010년, 2014년, 2018년, 2022년 5번의 지방선거 중 기초의원선거의 결과로 구성하였다(선거관리위원회 2023). 사표율과 후보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은 선거구 단위로 주요 변수들의 평균

값을, 당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은 후보자 단위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수들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수와 당선 여부는 지역 패권 정당 후보자와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주요 설명변수는 선거구 크기로 2인 선거구부터 5인 선거구까지를 포함한다. 단, 5인 선거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 동대문구마, 성북구가, 성북구나, 대구시 수성구마, 경기도 남양주시사, 충청남도 논산시가의 6개 선거구만을 포함한다. 기호 '가' 변수는 후보자의 당선 여부를 분석하는 모델에 포함되는 변수로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복수공천을 받고 기호 '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걸쳐 지속적인 기호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한다. 순서는 해당 후보가 받은 순서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선거구별로 등간을 가지는 정수로 재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1번, 2-가, 2-나, 2-다와 같이 복수공천된 후보자들이 있을 경우 순서변수는 이를 1, 2, 3, 4로 코딩한다. 현역 여부는 후보자가 현역 지방의원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성별은 여성일 경우 1 남성은 0으로 조작화되었다.

그 외에도 연령, 교육 수준, 여당 후보 여부, 제1야당 후보 여부, 선거구가 속한 지역, 선거경쟁도, 정치경력 여부 등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이 중 연령은 제공항과 구성항을 함께 통제하였는데, 유권자들이 나이 어린 정치 신인에 대해서도 크게 선호하지 않지만, 나이가 아주 많은 고령의 후보자의 경우에도 크게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선형적 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제49조 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만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일 이후 비공개로 전환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경제력 수준이 당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는 재산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선거구 단위 분석에는 선거구 내 현역 출신 후보자 비율, 여성 후보자 비율, 여당 후보자 비율 등과 평균 연령과 평균 연령의 제공항, 선거경쟁도가 포함되었다. 부록의 <표 A1>을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표 A2>에서는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세 모델을 추정한다. 첫 번째로 선거구 크기에 따른 사표 감소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속형 변수인 사표율을 종속변수로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선형회귀모델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중선거구제 도입이 기대한 바와 같이 다양한 후보들을 유인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가 실질적인 소수 정당 독점을 완화하는 재편 효과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구 단위의 출마 후보자의 수를 종속변수로 주어진 설명변수들을 포함하여 푸아송(poisson) 회귀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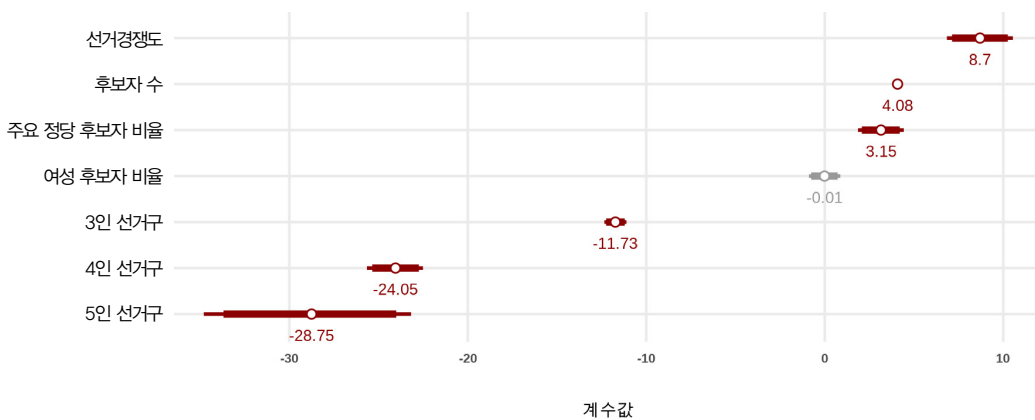
과 후보자 단위의 당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각각 추정한다. 푸아송 모델은 종속변수가 어떠한 사건 발생의 횟수와 같은 0 이상의 이산형 정수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질 때 사용한다.

이 두 모델은 모두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선형 관계를 추정하므로 계수값을 선형 회귀모델처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푸아송 회귀모델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경우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예측값과 예측 확률의 변화로 제시한다.

2. 분석 결과

〈그림 2〉는 선거구 크기가 기초의원선거의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선형회귀모델의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출마한 후보자들 중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선거구에서 얻은 표를 전체 투표수로 나누어 구한 사표율이다. 이때, 선거구의 크기 변수는 2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각 선거구 크기가 사표율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2〉 선거구 크기와 사표율에 대한 선형회귀모델



비고: 점은 선형회귀모델의 계수값의 점추정치, 굵은 선과 얇은 선은 각각 90%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절편은 제외하였고, 기초의원선거에서 5인 선거구는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동대문구 바, 성북구가, 성북구나, 대구시 수성구마, 경기도 남양주시사, 충청남도 논산시사의 6개 선거구이다.

2인 선거구에 비하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그리고 5인 선거구 모두 사표율의 감소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2인 선거구에 비하여 3인 선거구는 평균적으로 약 11.7% 정도 낮은 사표율을 보이며, 4인 선거구는 약 24% 낮은 사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선거구의 경우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6개 선거구만이 분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례의 수가 적지만 2인 선거구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약 28.8% 낮은 사표율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중선거구제가 사표 감소를 통한 선거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과연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이나 군소 정당 소속의 후보자와 같은 정치적 소수파에게 원내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중선거구제의 도입 이후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 크기에 따른 후보자의 수를 푸아송 회귀모델로 분석하였다. <표 1>의 결과는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지역 패권 정당과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수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보자의 유인이 실질적인 선거 결과를 재편하거나 기대한 바와 같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주요 정당의 독점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당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추정하였다.

<표 1> 선거구 크기와 소속 정당 유형별 출마 후보자의 수: 푸아송 모델

		종속변수: 후보자의 수	
		모델 1: 지역 패권 정당	모델 2: 군소정당/무소속
선거구 크기	3인 선거구	0.35*** (0.03)	0.44*** (0.03)
(2인 선거구 = 1)	4인 선거구	0.61*** (0.06)	0.78*** (0.06)
	현역 비율	-0.08 (0.05)	-0.59*** (0.06)
	여성 후보자 비율	-0.04 (0.07)	0.00 (0.09)
	평균 연령	0.01 (0.04)	0.07 (0.05)
	평균 연령 ²	-0.00 (0.00)	-0.00 (0.00)
	부산/울산/경상남도	-0.11 (0.06)	0.06 (0.08)
	대구/경상북도	-0.09 (0.08)	0.14 (0.09)
	광주/전라북도/전라남도	-0.33*** (0.09)	0.24** (0.09)
	여당 후보자 비율	0.01 (0.06)	-1.16*** (0.06)
	선거경쟁도	0.19* (0.04)	-0.25*** (0.04)
	(상수항)	0.55 (0.99)	-0.19 (1.25)

18 선거연구 제18호

	종속변수: 후보자의 수	
	모델 1: 지역 패권 정당	모델 2: 군소정당/무소속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정효과	Y	Y
지방선거 선거구 고정효과	Y	Y
AIC	17468,29	16952,23
BIC	24315,72	23799,66
로그우도비	-7682,15	-7424,12
관측치 수	4,959	4,959

〈표 2〉는 후보자의 당선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델 결과를 보여준다. 지역 패권 정당 소속의 후보자의 경우 2인 선거구에 비하여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일 경우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2인 선거구에 비해 4인 선거구일 경우 지역 패권 정당 소속 후보와는 반대로 당선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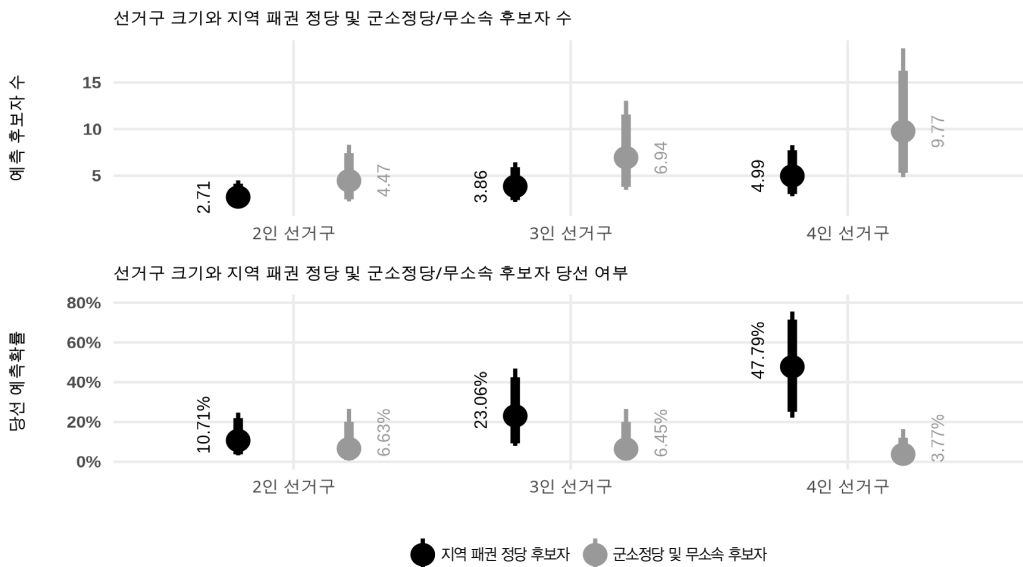
〈표 2〉 선거구 크기와 소속 정당 유형별 출마 후보자의 당선 확률: 로짓 모델

		종속변수: 후보자의 당선 여부	
		모델 1: 지역 패권 정당	모델 2: 군소정당/무소속
선거구 크기	3인 선거구	0.96*** (0.06)	-0.04 (0.09)
	(2인 선거구 = 1) 4인 선거구	2.16*** (0.15)	-0.65*** (0.19)
	기호 '가'	1.75*** (0.05)	-0.05 (0.09)
	기표 순서	-1.04*** (0.02)	0.15*** (0.01)
	선거경쟁도	-1.04*** (0.21)	0.74* (0.33)
	정치경력	0.31*** (0.05)	0.58*** (0.09)
	제1야당 (야당 = 1)	1.72*** (0.04)	-17.90 (184.16)
	현역 여부	0.37*** (0.06)	0.50*** (0.09)
	성별 (여성 = 1)	-0.46*** (0.06)	-0.01 (0.10)
	연령	0.15*** (0.02)	0.04 (0.03)
	연령 ²	-0.00*** (0.00)	-0.00* (0.00)
	교육 수준	0.07*** (0.02)	0.04* (0.02)
	부산/울산/경상남도	-0.10 (0.15)	1.00*** (0.24)
	대구/경상북도	0.05 (0.18)	0.34 (0.30)
	광주/전라북도/전라남도	-0.90*** (0.21)	1.68*** (0.27)
	(삼수항)	-2.20** (0.85)	-4.88*** (1.34)

	종속변수: 후보자의 당선 여부	
	모델 1: 지역 패권 정당	모델 2: 군소정당/무소속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정효과	Y	Y
지방선거 선거구 고정효과	Y	Y
AIC	19540.37	11736.68
BIC	28215.15	20411.45
로그우도비	-8714.19	-4812.34
관측치 수	27,303	27,303

〈그림 3〉은 〈표 1〉과 〈표 2〉의 통제변수들의 값을 중앙값 혹은 평균값으로 고정하였을 때, 선거구 크기에 따른 기초의원선거에서의 예측 후보자 수와 예측 당선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선거구 크기에 따라 추정된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2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주요 정당 소속의 후보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평균적으로 약 2.71명에서 약 4.9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도 선거구 크기가 증가할수록 선거구 내 예측 후보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

〈그림 3〉 선거구 크기와 지역 패권 정당 및 군소정당/무소속 후보자 수와 당선 예측확률



비고: 기초의원선거에서 5인 선거구는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동대문구바, 성북구가, 성북구나, 대구시 수성구마, 경기도 남양주시사, 충청남도 논산시사의 6개 선거구이다. 2022년에 한정된 적은 사례 수로 인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분석에서 제외하였지만 5인 선거구를 포함하여도 주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나타나며, 그 증가 효과는 2인 선거구일 경우 약 4.47명에서 4인 선거구 약 9.77명으로 주요 정당 소속 후보자일 경우에 비하여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일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보다 큰 선거구를 가지는 제도는 후보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푸이송 회귀모델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주요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경우 당선될 확률은 2인 선거구일 경우 약 10.7%에서 3인 선거구 23.1%, 4인 선거구 47.8%로 증가하지만,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의 경우 선거구 크기에 따른 당선 예측확률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2인 선거구일 때 6.6%, 3인 선거구는 6.5%, 그리고 4인 선거구는 3.8%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소선거구제로부터 중선거구제로의 변화는 후보자를 유인하는 제도적 효과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가 원내에 진입하는 데에는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2>는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에서, 특히 지역 패권 정당 후보자들에게 있어서 기호 '가'번을 받은 후보의 당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에게는 복수공천에 따른 기호 효과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었다. 이는 지역 패권 정당 후보자는 공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복수로 공천을 받더라도 기호 '가'번을 받을 경우 당선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선거구제 도입 이후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공천을, 그리고 복수공천 시 기호 '가'번을 받기 위해 중앙당에 예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약 16년에 걸친 기간 동안의 이러한 일관된 기호효과의 양상은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기대한 효과보다는 지역 패권 정당의 독점 양상을 더 강화하거나 당내 파벌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논의

기초의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시행이 미칠 영향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서 선거구 크기는 지역주의 타파에 큰 역할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저조한 관심과 정보로 인해 기호효과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선거구 효과 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와 같은 정당 체제 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인하여 지역 패권 정당들의 양당 체제 편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개편을 통해 정당 체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거구 단위와 후보자 단위에서의 사표율, 출마 후보자 수, 그리고 당선 여부를 분석하여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선거구제는 사표를 감소시키고, 후보자들이 출마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어주지만, 그로 인한 수혜는 오롯이 지역 패권 정당 소속의 후보자들에게만 돌아갔다. 즉, 중선거구제 도입은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입하더라도 지역주의 타파나 특정 정당의 독점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또한, 후보자의 정책이나 개인적 역량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양대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가' 기호의 배정만 확정된다면 선거운동기간의 홍보 혹은 별도의 공약 이행 약속 등 유권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줄이고도 부당하게 당선될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가' 기호 획득을 통해 얻은 추가적인 평균 득표율로 인해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선거제도의 문제이다.

현행 수준의 중선거구제가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입될 시, 동일 정당 복수 후보자가 한 선거구에 출마하게 되면, 난립하는 여타 후보자들로 인해 유권자는 높은 정치정보에 대한 비용을 청구받게 될 것이며 후보자들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 공천에 줄을 서게 되는 등 심각한 당내 파벌화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중선거구제 도입은 황아란 (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제도로서 선거구 크기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대안과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선거제도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선거제도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국민들에 의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합의된 내용을 구현하는 도구이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실시된 가로 순환배열 투표용지와 같이 투표용지의 변화를 통한 개선을 비롯하여 현재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천 문제로 인해 투명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보다 민주적인 선거 운영에 관한 문제 개선 노력 등을 포괄적인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의미인 참여에 대한 관심도 포함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호효과는 정보와 관심이 부족한 선거에서 더 강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유권자 후보 결정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 공보물을 일찍 발행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선거 정보의 접근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선거제도의 도입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압축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해왔지만, 그만큼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들 간의 연계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질적 심화과정의 한계를 가진다(임혜란 2018). 따라서 한국의 선거정치의 오래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해법만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정치적 엘리트 층원의 질적 제고 및 제도화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참 · 고 · 문 · 헌

- 강원택. 2009.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입법과 정책』1-1, 35-54.
- 김만흠. 2011. “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개편 논란과 새로운 대안.” 『한국정치연구』 20-1, 236-257.
- 김범수 · 서재권. 2012. “투표용지의 순서효과와 기호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6-2, 141-161.
- 김순은. 2015.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입법과 정책』 7-1, 57-82.
- 김영태. 2011.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미래정치연구』 1(1): 113-135.
- 김정도. 2012. “기초의원선거의 선거구 크기의 효과: 제4회 및 제5회 기초의원선거의 유효정당수 측정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2-3, 267-286.
- 김종갑 · 신두철. 2014. “2013년 독일선거제도의 변화와 한국 총선에의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48-1, 207-220.
- 김종갑 · 이정진.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이슈와 논점』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28679>(검색일: 2023.3.31).
- 김형철. 2017.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과 쟁점.” 『민주주의와 인권』 17-4, 69-102.
- 매일경제. 2023. “비례대표 110석 뽑아 민심 제대로 반영.”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01428>(검색일: 2023.3.31).
- 문은영. 2011. “투표용지의 정치적 효과.” 『선거연구』2, 243-283.
- 서울신문. 2023. “거대양당이 국회 독식...다당제 위해 중대선거구제라도 도입해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6005003&wlog_tag3=naver(검색일: 2023.3.31).
- 선거관리위원회. 2023. “국가선거정보 개방포털시스템.” <http://data.nec.go.kr/main.do>(검색일: 2023.3.31).
- 송기창 · 박소영. 2011.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기호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29-2, 239-260.
- 시사저널. 2019. “선거제 개혁안 시뮬레이션...민주당 16석-한국당 12석 줄어.”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538>(검색일: 2023.3.31).
- 신명숙. 2000. “지방의회의 선거제도와 의원지위의 비교분석.” 『사회과학논집』 30, 67-94.
- 안승국. 2010.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의교사논총』 32-1, 259-288.
- 안철현. 2011.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효과.” 『21세기정치학회보』 21-2, 43-55.
- 오현주, 송진미, 길정아, 강원택. 2014. “정당 호감도와 회고적 평가: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

24 선거연구 제18호

- 로.” 『한국정당학회보』 13-3. 69-97.
- 이재훈 · 고선규, 2014, “2014년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기호효과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3-3. 99-122.
- 이정섭 · 조한석 · 지상현. 2020. “제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판적 검토: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와 선거구제 논의의 실종.” 『국토지리학회지』 54-4. 519-529.
- 임혜란. 2018.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한국정치연구』 27-1. 347-373.
- 장훈. 2012. “19대 총선 결과의 의미.” 『21세기정치학회보』 22-3. 133-152.
- 전용주. 2019. “후보의 선거 경쟁력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9-4. 23-41.
- 정준표. 2014.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 효과.” 『한국정치연구』 23-2. 129-160.
- 정준표. 2010. “현행 기초의원 선거의 선거구제: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18-1. 346-370.
- 정준표. 2007. “5·31 기초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선거제도의 효과: 도시와 농촌의 차이.” 『한국정당학회보』 6-20. 29-63.
- 조선일보. 2023. “윤석열이 쏟아올린 중대선거구제... 與, 과반 의석 가능할까.”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22/1C32L7QESVGFJLC4WYXNB7KRGB/ (검색일: 2023.3.31).
- 조성대. 2010.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6·2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선거구제 비교.” 『현대정치연구』 3-2. 115-150.
- 차재권 · 박지원 · 정호영. 2020.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SNS 활용의 선거효과: 제21대 총선의 영·호남 지역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4-4. 51-59.
- 참여연대. 2020.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707157>(검색일: 2023.3.31).
- 한겨레. 2023. “선거제도 개혁 ‘20년 흑역사’...양당 기득권에 개악·꼼수 얼룩.”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6128.html>(검색일: 2023.3.31).
- 한겨레21. 2021. “위성정당 효과 시뮬레이션 해보니 민주·국힘 15석.”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219.html(검색일: 2023.3.31).
- 한국일보. 2023. “선거제 개편 마중물 된 국회 전원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410410000189>(검색일: 2023.4.25).
- 허석재. 2019. “지역균열은 어떻게 균열되는가?: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 이념 세대의 상호작용.” 『현대정치연구』 12-2. 5-37.
- 황아란. 2007. “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지방정부연구』 11-1. 209-225.
- 황아란. 2010. “기초 지방의원선거와 기호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4-1. 107-124.
- Abramson, Paul R. et al. 2010. “Comparing Strategic Voting Under FPTP and PR.”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3, No.1. 61-90.
- BBC. 2023. “선거제도 개혁 ‘올해가 적기’ 관련 논의 본격화…이번엔 성공할까.” <https://www.bbc.com/korean/news-64449441>(검색일: 2023.3.31).
- Cox, Gary W.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x, Gary W. and Katz, Jonathan N. 1996. “Why Di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House Elections Gro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 No.2. 478-497.
- Geys, Benny. 2006. “District Magnitude, Social Heterogeneity and Local Party System Fragmentation.” *Party Politics* 12, No.2. 281-97.
- Hsieh, John Fuh-sheng, and Richard G Niemi. 1999. “Can Duverger’s Law Be Extended to SNTV? The Case of Taiwan’s Legislative Yuan Elections.” *Electoral Studies* 18, No.1. 101-16.
- Kim, HeeMin, Jun Young Choi, and Jinman Cho. 2008. “Changing Cleavage Structure in New Democracies: An Empirical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in Korea.” *Electoral Studies* 27, No.1. 136-50.
- Lipset, Seymour M. and Rokkan, Stei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Free Press.
- Matususaka, John G. 2013. “In Search of Ballot Order Effects in Proposition Elections.” Working Paper. http://www-bcf.usc.edu/~matususak/Papers/Matususaka_In_Search_201308.pdf(검색일: 2023.3.31).
- Neto, Octavio Amorim, and Gary W. Cox. 1997. “Electoral Institutions, Cleavage Structures, and the Number of Par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No.1. 149-74.
- Ordeshook, Peter C., and Olga V. Shvetsova. 1994. “Ethnic Heterogeneity, District Magnitude, and the Number of Par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No.1. 100-123.
- Raymond, Christopher D. 2017. “The Effects of District Magnitude and Social Diversity on Party System Fragmentation in Majoritarian Systems.”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 2, No.4. 311-26.
- Riker, William H. 1962.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 Yale University Press.
- Shugart, Matthew S., and Rein Taagepera. 2018. “Electoral System Effects on Party Systems.” *The Oxford Handbook of Electoral Systems*. Erik S. Herron, Robert J. Pekkanen, and Matthew S. Shugart, eds. Oxford University Press. 40-68. <https://academic.oup.com/edited-volume/27944/chapter/211873410>(March 24, 2023).(검색일: 2023.3.31).
- Singer, Matthew M., and Laura B. Stephenson. 2009. “The Political Context and Duverger’s

26 선거연구 제18호

- Theory: Evidence at the District Level.” *Electoral Studies* 28, No.3. 480-91.
- SBS. 2023.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의원 100명이 토론한 결과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8009(검색일: 2023.4.25).
- Taagepera, R., and M. S. Shugart. 1989. “Designing Electoral Systems.” *Electoral Studies* 8, No.1. 49-58.
- YTN. 2023. “국회 전원위원회 이틀 차...지역구 선거제 난상토론.”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110003491357(검색일: 2023.4.25).
- Zielinski, 2002. “Translating Social Cleavages into Party Systems: The Significance of New Democracies.” *World Politics* 54, No.2. 184-211.

투고일자: 2023년 3월 31일, 심사일자: 2023년 4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15일

부록

〈표 A1〉 변수 설명

변수명	설명
당선 여부	후보자의 당선 여부 (당선 = 1)
지역 패권 정당 후보자 수	선거구 내 주요 정당 출신 후보자의 수 (주요 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열린우리당, 민주당(2010 제외),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군소정당/무소속 후보자 수	선거구 내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의 수
2인 선거구	선거구 크기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선거구 크기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선거구 크기 (4인 선거구)
기호 '가'	기호 '가' 번 여부
순서	기호 순번
현역 여부	현역 여부 (현역 = 1)
성별	성별 (여성 = 1)
연령	연령(세)
교육 수준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재학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야당 여부	제1야당 여부 (야당 = 1)
선거경쟁도	$1 - ((1\text{위 득표} - 2\text{위 득표}) / (1\text{위 득표} + 2\text{위 득표}))$
부산/울산/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정치경력 여부	정치 관련 경력(정당인, 정치인, 전현직 의원 등 = 1)
현역 비율	선거구 내 후보자들 중 현역 후보자의 비율
여성 후보자 비율	선거구 내 후보자들 중 여성 후보자의 비율
평균 연령	선거구 내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
여당 후보자 비율	선거구 내 후보자들 중 당시 여당 소속 후보자의 비율

〈표 A2〉 표본의 기술통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제4회 동시지방선거						
당선 여부	7,964	0.32	0.46	0	0	1
2인 선거구	7,964	0.48	0.5	0	0	1
3인 선거구	7,964	0.45	0.5	0	0	1
4인 선거구	7,964	0.07	0.25	0	0	1
기호 '가'	7,964	0.17	0.37	0	0	1
순서	7,964	4.9	3.13	4	1	22
현역 여부	7,964	0.2	0.4	0	0	1
성별	7,964	0.05	0.22	0	0	1
연령	7,962	50.48	8.39	50	25	81
교육 수준: 초졸 이하	7,446	0.06	0.23	0	0	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446	0.08	0.27	0	0	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7,446	0.22	0.41	0	0	1
교육 수준: 대졸 이하	7,446	0.05	0.22	0	0	1
교육 수준: 대재	7,446	0.2	0.4	0	0	1
교육 수준: 대졸 이상	7,446	0.39	0.49	0	0	1
여당 소속 여부	7,964	0.16	0.37	0	0	1
제1야당 소속 여부	7,964	0.24	0.43	0	0	1
선거경쟁도	7,964	0.85	0.11	0.86	0.44	1
부산/울산/경상남도	7,964	0.16	0.37	0	0	1
대구/경상북도	7,964	0.14	0.35	0	0	1
광주/전라	7,964	0.17	0.38	0	0	1
정치경력 유무	7,964	0.29	0.45	0	0	1
제5회 동시지방선거						
당선 여부	5,806	0.43	0.5	0	0	1
2인 선거구	5,807	0.49	0.5	0	0	1
3인 선거구	5,807	0.46	0.5	0	0	1
4인 선거구	5,807	0.04	0.2	0	0	1
기호 '가'	5,806	0.23	0.42	0	0	1
순서	5,807	3.69	2.26	3	1	18
현역 여부	5,807	0.23	0.42	0	0	1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성별	5,807	0.09	0.29	0	0	1
연령	5,806	51.54	7.91	51	26	80
교육 수준: 초졸 이하	5,537	0.03	0.18	0	0	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537	0.05	0.21	0	0	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537	0.17	0.38	0	0	1
교육 수준: 대졸 이하	5,537	0.08	0.27	0	0	1
교육 수준: 대재	5,537	0.26	0.44	0	0	1
교육 수준: 대졸 이상	5,537	0.41	0.49	0	0	1
여당 소속 여부	5,807	0.33	0.47	0	0	1
제1야당 소속 여부	5,807	0.22	0.41	0	0	1
선거경쟁도						
부산/울산/경상남도	5,807	0.15	0.36	0	0	1
대구/경상북도	5,807	0.13	0.33	0	0	1
광주/전라	5,807	0.18	0.38	0	0	1
정치경력 유무	5,807	0.4	0.49	0	0	1
제6회 동시지방선거						
당선 여부	5,311	0.46	0.5	0	0	1
2인 선거구	5,311	0.47	0.5	0	0	1
3인 선거구	5,311	0.49	0.5	0	0	1
4인 선거구	5,311	0.05	0.21	0	0	1
기호 '가'	5,311	0.23	0.42	0	0	1
순서	5,311	3.47	2.04	3	1	14
현역 여부	5,311	0.24	0.43	0	0	1
성별	5,310	0.14	0.35	0	0	1
연령	5,311	52.81	8.12	53	25	80
교육 수준: 초졸 이하	5,145	0.01	0.12	0	0	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145	0.03	0.18	0	0	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145	0.14	0.35	0	0	1
교육 수준: 대졸 이하	5,145	0.04	0.2	0	0	1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교육 수준: 대재	5,145	0,3	0,46	0	0	1
교육 수준: 대졸 이상	5,145	0,47	0,5	0	0	1
여당 소속 여부	5,311	0,34	0,47	0	0	1
제1야당 소속 여부	5,311	0,25	0,43	0	0	1
선거경쟁도	5,311	0,87	0,1	0,9	0,5	1
부산/울산/경상남도	5,311	0,17	0,37	0	0	1
대구/경상북도	5,311	0,13	0,33	0	0	1
광주/전라	5,311	0,19	0,39	0	0	1
정치경력 유무	5,311	0,44	0,5	0	0	1
제7회 동시지방선거						
당선 여부	5,288	0,47	0,5	0	0	1
2인 선거구	5,288	0,46	0,5	0	0	1
3인 선거구	5,288	0,49	0,5	0	0	1
4인 선거구	5,288	0,05	0,21	0	0	1
기호 '가'	5,288	0,22	0,41	0	0	1
순서	5,288	3,36	1,95	3	1	14
현역 여부	5,288	0,24	0,43	0	0	1
성별	5,288	0,19	0,39	0	0	1
연령	5,288	53,58	8,62	55	25	80
교육 수준: 초졸 이하	5,160	0,01	0,1	0	0	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160	0,02	0,15	0	0	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160	0,11	0,32	0	0	1
교육 수준: 대졸 이하	5,160	0,06	0,23	0	0	1
교육 수준: 대재	5,160	0,3	0,46	0	0	1
교육 수준: 대졸 이상	5,160	0,5	0,5	0	0	1
여당 소속 여부	5,288	0,32	0,47	0	0	1
제1야당 소속 여부	5,288	0,28	0,45	0	0	1
선거경쟁도	5,288	0,81	0,12	0,82	0,46	1
부산/울산/경상남도	5,288	0,17	0,38	0	0	1
대구/경상북도	5,288	0,15	0,35	0	0	1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광주/전라	5,288	0.18	0.38	0	0	1
정치경력 유무	5,288	0.47	0.5	0	0	1
제8회 동시지방선거						
당선 여부	4,130	0.56	0.5	1	0	1
2인 선거구	4,130	0.36	0.48	0	0	1
3인 선거구	4,130	0.55	0.5	1	0	1
4인 선거구	4,130	0.08	0.26	0	0	1
5인 선거구	4,130	0.01	0.11	0	0	1
기호 '가'	4,130	0.28	0.45	0	0	1
순서	4,130	3.07	1.75	3	1	12
현역 여부	4,130	0.29	0.45	0	0	1
성별	4,130	0.22	0.42	0	0	1
연령	4,130	53.57	9.68	55	18	81
교육 수준: 초졸 이하	4,066	0.01	0.08	0	0	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066	0.01	0.11	0	0	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066	0.09	0.29	0	0	1
교육 수준: 대졸 이하	4,066	0.08	0.26	0	0	1
교육 수준: 대재	4,066	0.29	0.46	0	0	1
교육 수준: 대졸 이상	4,066	0.52	0.5	1	0	1
여당 소속 여부	4,130	0.37	0.48	0	0	1
제1야당 소속 여부	4,130	0.37	0.48	0	0	1
선거경쟁도	4,130	0.87	0.11	0.9	0.45	1
부산/울산/경상남도	4,130	0.17	0.37	0	0	1
대구/경상북도	4,130	0.16	0.37	0	0	1
광주/전라	4,130	0.19	0.39	0	0	1
정치경력 유무	4,130	0.54	0.5	1	0	1

[Abstract]

Multi-Member District and Survival of the Third Party: The Cases between the 4th and 8th Korean Local Elections

Park, Sanghoon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Lee, Chae-Hoon |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KETI)

South Korea's upcoming 2024 general election call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reform the electoral system and establish new rules. President Yoon Seok-yeol's media interview in January 2023 suggests implementing a multi-electoral district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past 16 years of municipal council elections to determine if a multi-member district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s general election will have expected effects or encounter previous issues. Findings indicate that as district size increases, dropout rates decrease, and the number of candidates running for office increases regardless of party affiliation.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winning for regional dominant party candidates significantly increases with district size, while minor parties and independents' predicted probability of winning remains unchanged or decreases. Furthermore, a consistent ballot order effects in municipal council elections has been observed. Incorporating multi-member districts in general elections is more likely to replicate the issues seen in local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 leading to increased intra-party competition and factionalization over regional dominant parties' nomination. Therefore, multi-member districts may not produce the desired outcomes for the National Assembly's general election.

-
- **Keyword:** Multi-member districts, Regional dominant party, the third party, Municipal council elections, ballot order effects

청소년 유권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정치정보 수집 및 투표 경험 탐색*

이지영 | 경기도교육연구원**
손다정 |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김아미 |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고3 학생 유권자의 대선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수집 및 투표 경험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고,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이론적 인과 모형'과 정보의 신뢰성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3 학생들은 주로 가족, 친구 등과 대선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를 교류하지만 정보는 일방향적 흐름을 보이거나 민감한 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깊이 논의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는 판단에 개입하는 사람(가족, 친구 등)이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경로로 정보를 찾는 등 복합적인 과정을 거친다. 한편,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이 만든 정보는 편향적일 수 있는 정보로, 레거시 미디어나 공기관에서 발행한 정보는 '공식적' 정보로 받아들인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여러 사람과 정치적 정보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필요성, 정보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과 올바른 정보 판단 기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침을 제공할 필요성, 사회적 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공론장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고등학생 유권자, 청소년 유권자, 투표, 정치정보, 대통령 선거

* 이 논문은 2022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한 『고등학생 유권자의 정치정보 수집과 투표 경험 탐색: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jeeyoung@gie.re.kr

*** 교신저자, amkim@snu.ac.kr

I. 서론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직선거법이 2020년 개정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공직선거법 2020). 이로 인하여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서는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하 고3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준에 의하면, 제20대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의 학생 유권자 수는 111,932명으로(손현경 2022; 정민영 2022; 이후연 2022), 이는 선거인명부 기준 제20대 대선 유권자 총 44,197,692명(행정안전부 2022) 중 약 0.2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¹⁾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선거인 수가 11,428,857명²⁾으로 전국 선거인 수의 2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행정안전부 2022), 이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준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으로 대선 투표권을 가진 학생은 27,614명이다(경기도교육청 2022). 경기도의 총 선거인 중 학생 유권자의 비율은 0.24%로 전국 선거인명부 기준 대비 전국 학생 유권자 비율과 비슷하다.

제20대 대선에서 18세인 고3 학생 유권자의 비율은 전체 유권자 중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며, 일각에서는 “첫 투표를 하게 될 10대 유권자가 이번 대선의 ‘스윙 보터(swing voter)’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손현경 2022). 18세 유권자들이 “선거 등의 투표행위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두산백과 n.d.) ‘스윙 보터’로서 평가되고, 대선 후보자 간 1~2%p 차이로 당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10대 유권자 표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손현경 2022).³⁾ 그리고 선거 유세 당시, 대선 후보자를 내세운 각 정당은 고3 학생 유권자가 행할 투표권을 인식하고,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안석 외 2021). 고3 유권자 맞춤 전략은 이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18세인 고3 학생 유권자는 세대 분류상 Z세대로 일컬어지며 기존 유권자 세대와는 다른 세대 특징을 보인다. Z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연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개의 연구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부터 2010년 출생까지를 Z세대로 분류하는데(손정희

1)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2) “선거인 수 = 국내 선거인 수(거소·선상 포함) + 국외부재자 선거인 수”(행정안전부 2022, 2).

3) 실제 대선 투표 결과, 1, 2위 대통령 후보자 간 득표 차이는 48.56% : 47.83%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의 2021; 홍소희 외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7), Z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과 함께 했으며,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함께 성장했다는 점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7; 오수연 2018). 영상 기반 정보와 원할 때 바로, 빠르게 정보 접근이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가 사회적 이슈를 접하는 경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사람들의 게시글이나 유튜브(YouTube) 등의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짧게 편집된 뉴스 영상 등인 경우가 많다(김아미 외 2019). 이처럼 Z세대는 기존 세대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Z세대인 고3 학생 유권자들이 대선 관련 정보 수집 및 투표 시에도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지는 실제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 유권자 중 낮은 비율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는 18세 고3 학생 유권자들이 생애 첫 투표이며, 헌정사상 18세 유권자들의 첫 대선 투표인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 및 정치 정보 등을 어떻게 수집하고,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3 학생 유권자의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수집과 투표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고3 학생 유권자들은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등을 어떻게 수집하는가?

둘째, 고3 학생 유권자들은 수집한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신뢰하는가?

셋째, 고3 학생 유권자들의 제20대 대선 투표 참여 여부와 투표 참여 이유는 무엇인가?

18세 고3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 및 정치 정보 수집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 유권자들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과정과 직접 참여의 간극을 파악하고,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교육을 탐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분석틀

1. 선행연구 분석

18세 유권자 관련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 전 수행된 연구들은 18세 선거권 부여의 타당성 검토 또는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들(김지혜 2014; 김효연 2016; 김효연 2018)은 헌법재판소의 19세 미만 사람의 선거 활동 및 선거 연령에 대한 위헌 판결은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보는 전제가 적용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전제와 이에 파생되는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헌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의 선거 원칙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지역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김효연 2018, 215-2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수행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수행된 대다수의 연구는 18세 청소년들이 헌정 사상 처음 투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들의 정치참여행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미디어를 주요 요인으로 바라보았지만 다른 결과를 보였다(이창호 2021; 이성진 외 2021; 권예지 외 2021; 류영철 2021; 한숙희 외 2021). 우선 이창호(2021)에 의하면, 청소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 온라인 대화, 자신과 다른 관점이나 이견에 많이 노출되거나 토론에 참여한 경우, 정치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이 정치 대화를 매개해 정치 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성진 외(2021)에 의하면, 18~19세 청소년 유권자는 주로 텔레비전이나 포털을 중심으로 정치 정보를 획득하며, 미디어가 전달하는 기사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예지 외(202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소셜 뉴스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뉴스를 공유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행동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에서 정치정보를 취득하고 공유하는 경험이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류영철(2021)의 연구는 18세 선거권 도입과 관련하여 대구지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의식과 정치 판단력에 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은 높고, 학교와 교사 영향력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교과·비교과 활동과 제21대 총선거 사전 선거교육은 정치 판단력 형성과 투표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한숙희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효능감(내적효능감, 외적효능감), 정치 관심, 정치 대화, 미디어 이용은 청소년의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투표 참여에 ‘법과 정치’ 선택 과목, ‘투표 교육’ 과 같은 정치 관련 교육 여부, 투표 참여 경험과 참여 활동 경험, 정치의식, 이슈 요인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당 후보지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숙희 외 2021). 또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유권자 집단의 투표 선택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이용의 효과 및 온라인 정치 대화 빈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면대면으로 정치 대화를 나누는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영 2022).

청소년이 정치정보를 취득한 경로나 정치 및 선거 참여 경험 실태를 조사한 연구도 소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53.9%가 “친구, 부모님, 학교 선생님, 형제·자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정치 문제나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으며, 고등학생의 27%가 정치 문제나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유인물이나 대자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거나 “피케팅, 집회, 거리행진 등에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 2019, 1-2). 이창호(2020) 연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8세 청소년들은 선거나 정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포털뉴스(85.7%), TV(71.3%), SNS(68.0%), 유튜브(57.3%) 순으로 이용하며, 선거 관련 대화는 주로 가족(73.3%), 친구(6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외(2022)의 연구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고등학생들이 정치 문제 및 이슈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주로 부모, 친구인 반면, 학교 교사와는 정치 문제 및 이슈 관련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정보를 얻기 위한 미디어 플랫폼으로는 TV 뉴스와 포털 뉴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지영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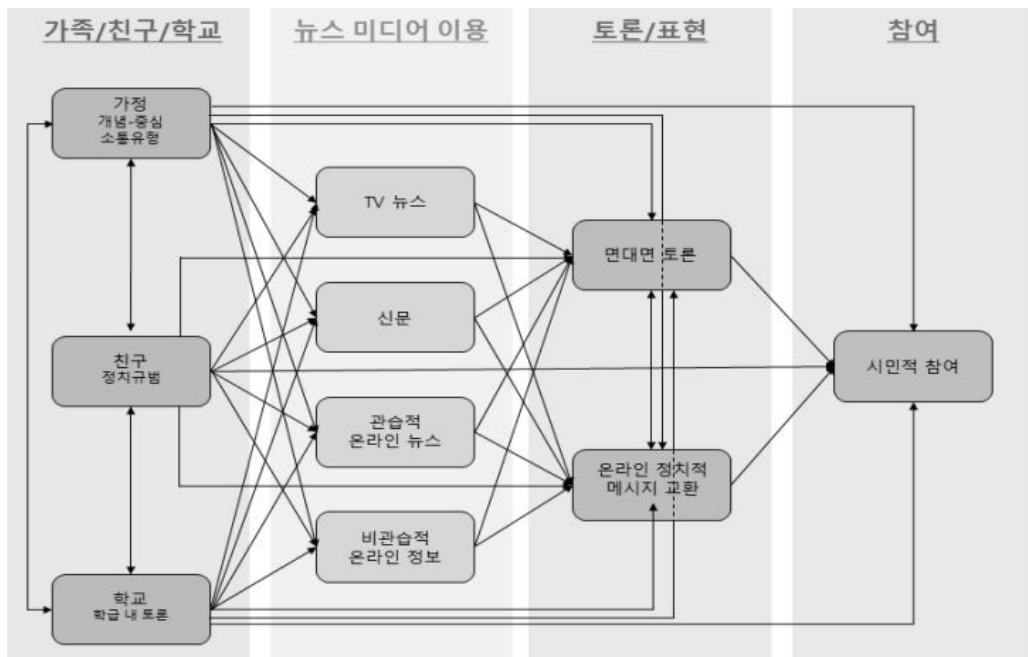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 유권자와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18세 유권자의 정치 참여 행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거나 연구 결과로 도출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18세 유권자의 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정치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정 요인에 한정된 연구를 진행하여 포괄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점에서 18세 유권자들이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투표와 같은 정치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분석틀

1) 커뮤니케이션 매개모델

18세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시민적 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선거 및 정치 정보 수집, 판단,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 등이 포함된다. 리, 샤, 맥러드(Lee et al. 2013)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시민성(citizenship)을 함양하는 과정을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이론적 인과 모형(Theorized casual model of communication mediation for youth civic engagement)’으로 제안하였다. 이들은 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다양한 민주적 결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communication)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매개모델(communication mediate models)’을 발전시켜 이 모델에 가족, 학교, 미디어, 또래 네트워크와의 상호의존적 의사소통 과정을 결합하여 기존 ‘커뮤니케이션 매개모델’을 확장하며 청소년들 사이의 적극적인 시민권을 함양하는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이론적 인과 모형’을 제안하였다(Lee et al. 2013, 671).

〈그림 1〉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이론적 인과 모형



출처: Lee et al. 2013, 682(양소은 2020, 29)에서 재인용.

특히 이 모델에서 가족, 학교, 또래의 영향이 다양한 형태의 시민적, 정치적 참여로 바뀌는 매개 과정에 뉴스 매체의 정보 이용과 청소년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라고 가정하였다(Lee et al. 2013, 671).

연구를 통해 리와 동료들(Lee et al. 2013, 686)은 “학교에서의 토의 활동, 민주적인 동료 규범, 뉴스 소비와 시민 의사소통(citizen communication)이 능동적인 시민으로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학교에서든, 또래들 사이에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시민적, 정치적 생활에서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 참여를 위한 정치정보 수집과 투표행위가 시민적 참여의 한 행위라는 점을 참작하여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이론적 인과 모형’(Lee et al. 2013)을 연구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고3 학생 유권자들의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수집과 투표 경험을 분석하였다.

2) 정보의 신뢰성 판단 기준

투표라는 정치 참여를 위해 학생 유권자들은 선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보를 수집 및 습득하는 경로는 다양하나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텔레비전, 신문 등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전통적 미디어, legacy media, old media)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new media, new new media)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이동후 2010). 또한 새로운 미디어는 다시 ‘뉴 미디어(new media)’와 ‘뉴 뉴 미디어(new new media)’로 나뉘는데, “‘뉴 미디어’는 인터넷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기존의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게 해 주고 텍스트 형태의 메시지를 주고받게 해 준다는 점에서 전통적 아날로그 미디어와 대비를 이루는 새로운 미디어”이며, “‘뉴 뉴 미디어’는 기존 콘텐츠의 소비 수준을 넘어 새로운 미디어 수용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뉴 미디어’와 구분된다”(Levinson 2009; 이동후 2010, 55에서 재인용).

미디어 이용자는 신뢰성을 기준으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의 취사 여부를 결정한다. 미디어 신뢰도(media credibility)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 이용자들이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한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요소가 무엇인지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가자아노와 맥 그라스(Gaziano et al. 1986)의 연구와 메이어(Meyer 1988)의 연구는 미디어 신뢰도를 측정하거나 신뢰도 요인을 도출하는 연구에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지아노와 맥 그라스(Gaziano et al. 1986)는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 관한 미디어 신뢰도 기준을 요인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그들은 “공정성(fair), 편파적이지 않음(are unbiased), 전말보도(顛末報道, tell the whole story), 정확성(are accurate), 타인의 사생활 존중(respect people’s privacy), 사람들의 관심 이후 주의하기(watch out after people’s interests),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관심(are concerned about the community’s well-being), 사실과 의견의 구분(separate fact and opinion), 신뢰성(can be trusted), 공익에 관한 관심(are concerned about the public interest), 사실성(are factual), 잘 숙련된 기자 보유(have well-trained reporters)”의 12개의 항목이 6개의 신뢰도 요인인 “공정성(being fair), 편파적이지 않음(unbiased), 신뢰 가치가 있음(trustworthy), 완전성(complete), 사실성(factual), 정확성(accurate)”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Gaziano et al. 1986, 454-460).

메이어(Meyer 1988)의 연구는 가지아노와 맥 그라스(Gaziano et al. 1986)의 연구에서 도출된 신뢰도 요인을 바탕으로 신문의 신뢰성 요인으로 “공정성(fair), 편파적이지 않음(unbiased), 전말보도(顛末報道, tell the whole story), 정확성(accurate), 신뢰성(can be trusted)”을 도출하였다(Meyer 1988, 573-574). 또한 선다(Sundar 1999, 380)는 신문과 온라인 뉴스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요인으로 “객관성(objective), 공정성(fair), 편향성[(un)biased]”을 사용했으며, 선다와 나스(Sundar et al. 2001, 62)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스에 대한 신뢰성 변수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정확성(accurate), 신뢰성(believable), 편향성(biased), 공정성(fair), 객관성(objective), 선정성(sensationalistic)”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고3 학생 유권자들의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수집과 투표 경험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 또는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표 1>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기준을 활용하였다.

〈표 1〉 미디어 신뢰도 측정 요인

연구	신뢰도 요인
Gaziano and McGrath(1986)	공정성, 편파적이지 않음, 신뢰 가치가 있음, 완전성, 사실성, 정확성
Meyer(1988)	공정성, 편파적이지 않음, 전말보도, 정확성, 신뢰성
Sundar(1999)	객관성, 공정성, 편향성
Sundar and Nass(2001)	정확성, 신뢰성, 편향성, 공정성, 객관성, 선정성

III. 연구 방법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의 제20대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수집 과정과 특징, 투표 경험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면담 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면담 대상자는 제20대 대선 투표권을 가진 2004년 1월 1일 출생부터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3월 10일생 포함)으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으로 한정하였다.⁴⁾ 면담 참여자 모집을 위해 학교 관리자, 교사, 고3 학생 등에게 면담 참여 가능 조건을 설명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며 면담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 섭외하였으며, 이후 눈덩이(snowball) 표집을 통해 면담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투표의 경우, 일정한 연령(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0대 대선에 투표권이 있고, 면담에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 유권자를 추천받았는데, 눈덩이 표집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별, 학교 유형 등이 비교적 다양하게 표집 되었다.

면담 중 투표 관련 민감정보가 언급될 수 있다는 점과 선거의 4대 원칙 중 비밀선거가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면담은 개별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9일부터 2022년 4월 2일까지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여 모든 면담은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면담으로 각 1회, 약 60분 정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비대면 면담을 용이하게 하는 ZOOM 프로그램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면담 시 비언어적 표현을 자세히 포착하기 어려운 점 등의 온라인 면담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면담 참여자인 고3 학생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나 민법 분류상 미성년이다.⁵⁾ 따라서 면담은 학생 본인의 면담 참여 동의뿐만 아니라 학생 보호자의 동의 및 허락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면담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보호 및 비밀 보장, 자발적 연구 참여 및 중지, 면담 녹음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면담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에 등장하는 면담 참여자 이름, 학교명 등 개인 정보는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면담 참여자의 정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4) 경기도 선거인 중 학생 유권자의 비율은 전국 선거인명부 기준 대비 전국 학생 유권자 비율과 비슷하여 면담 대상자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중 선거권을 가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5)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은 19세에 이른 사람을 의미한다(민법 2021).

〈표 2〉 면담 참여자

이름	학교명	학교 유형	성별
김종인	A고	일반고	남
김석진	A고	일반고	남
박서준	A고	일반고	남
임나연	A고	일반고	여
김남준	B고	일반고	남
김태형	C고	특목고	남
유지민	D여고	일반고	여
박지효	E여고	일반고	여
김민정	F여고	일반고	여
김지수	G고	특성화고	여
강슬기	H고	일반고	여
전정국	I고	일반고	남

면담 질문은 이성진 외(2021)의 연구와 이창호(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20대 대선 관련 정보 및 정치정보 수집 관련 내용과 투표 경험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3〉 면담 질문

영역	질문
평소 관심도	평소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
선거 관련 정보, 정치정보 수집 관련	대통령 후보자 정보, 공약 등 정보 수집 경로, 후보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보,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 주변 사람들과의 정보 교류
투표 경험	투표 여부 및 이유, 수집한 정보가 투표에 미친 영향

모든 면담은 전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진은 면담 분석을 위하여 디두스(Dedoos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목적을 고려하며 개방 코딩(opening coding)과 축 코딩(axial coding)을 시행하고, 이후 다시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하여 분석하였다. 전사 자료 분석을 통하여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의 탐색 및 수집 경로, 탐색 및 수집한 정보의 판단 및 판단 근거, 주변 사람들과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교류

의 세 범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세 범주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연속적이고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 범주에 따라 면담을 분석하지만, 일부 면담 내용은 범주 간 중첩되어 분석되기도 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면담 분석 시,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이론적 인과 모형’을 분석 틀로 사용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이론적 인과 모형’(Lee et al. 2013, 682)에서는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를 통해 접하는 정치정보가 뉴스 미디어 이용과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를 통해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 과정을 고려하여 면담 내용 분석하였다.

IV. 청소년 유권자의 대선 정보 수집과 투표 경험

1. 주변인과의 대선 관련 정보 및 정치정보 교류와 수집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이 주변인과의 대선 관련 정보 및 정치정보를 교류하고 수집한 경험을 살펴보면,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로 가족(부모, 조부모), 친구, 학교 교사 등으로부터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를 얻거나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선 관련 정보 및 정치정보를 교류하는 대상에 따라 정보의 깊이와 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1) 가족들과의 일방적 교류

학생들은 가족들(주로 부모)과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학생들은 부모 또는 조부모와 쌍방향적 정보 교환보다는 일방향으로 정보를 공급받는 특징을 보이며, 관련 정보는 주로 단어 뜻, 과거 사건 등과 같이 후보자와 공약을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식으로 한정된다.

(부모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 걸 검색하면, 부동산 정책 이렇게 검색하면 서로 싸우는 얘기만 나오고 각자의 입장만 나오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없거든요.(김석진)

부모로부터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학생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다. 부모의 정치 성향이 강할 때는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깊이 있는 교류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들은 부모에게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태도를 보인다.

부모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생들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지식일지라도 화자의 입을 통해 발화될 때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화자의 의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정보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객관적이지 않다'고 전제하고, 부모와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교류보다는 '듣는 정도'의 교류를 한다. 그리고 부모의 편향적 성향과 달리 자신 나름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대선 관련 정보를 판단하고자 노력한다.

이제 부모님은 한 정당에 이미 마음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도 않으셨고. 그냥 저한테 저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이런 약간 사건들,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정도로 의사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김지수)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근데 엄청 깊게는 아니고 그냥...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 정치 성향을 아는데, 저는 최대한 좀 공약을 보면서 하면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어떤 한쪽에 약간 치우쳐져 계시는 경향이 있어서 깊게는 대화를 못 나눴어요. 왜냐면 저랑 좀 다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은 거는 있어요.(임나연)

학생들은 친척들과 대선 및 대선 관련 정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민감한 얘기"인 만큼 가족 간에 대선 및 대선 관련 정치 대화를 피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일 경우, 서로 다른 정당 지지 등 견해가 다르거나 의견이 다르면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낼 것" 같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크게 싸우는 게 정치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관련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진술한다.

저희 가족은 친척이 모이면 서로 반대 정당을 지지해 가지고 아예 한 10년 전부터인가? 할머니가 모여서는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걸로 규칙을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혀 안 해요.
(김석진)

제가 좀 친척들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중략] (친척들과) 살아온 환경이 틀리니까 그런 (정치) 얘기는 아예 안 합니다.(박서준)⁶⁾

이처럼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족, 친척들로부터 정치정보를 습득하나, 이는 쌍방향 소통이라기보다 일방적 전달일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이 평소에 정치적 관점을 강하게 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 친척으로부터 접하게 되는 정치정보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친구들과의 제한된 쌍방향적 교류

학생들은 친구들과 정치 및 선거 관련해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었으며, 친구들과의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교류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대선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친구 또는 친구로부터 받은 정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하기에는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가 민감한 주제라고 인식하며, 이 점에서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좀 이렇게 정치로 인해서 좀 교우 관계가 틀어질 수 있을까 봐 그냥 민감한 부분은 잘 안 건드리는 편이에요, 보통은.(전정국)

원래는 친구들이어도 민감해서 그런 주제로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래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은 주제가 싫어가지고 많이 제가 먼저 화두를 냈던 것 같아요. [중략] 마음만큼은 부모님을 위에 두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친구들이 가장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친구들). 그다음에 부모님.(김종인)

학생들은 친구들과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때, 자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성향이나 견해를 가진 친구와만 교류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에 대해 친구가 자신과 다른 성향이나 이견(異見)을 보이면, 대화를 중단 또는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는 높은 이해의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그 어느 경우라도 학생들은 정치 주제가 민감한 주제를 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고 있다.

6) 문맥상 '환경이 틀리니까'보다 '환경이 다르니까'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면담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표기하였다.

일단 친구랑 저랑 지지하는 게 다르면 대화가 이어나가지 않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대화가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지하게 크게 싸우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간 말싸움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싫어가지고 피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김석진)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있는 지역에는 저랑 성향이 다른 친구들이 좀 더 많아요. 특히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고, 여자애들하고도 얘기하고. [중략] (선거 후보 얘기하며 친구들이) 저한테도 닳두리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바뀌겠구나 이러면서 막 좋아도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신 강요하지 않는. 그냥 서로 인정해 주면서. 그 대신 우리 후보가 이런 점에서 더 난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얘기는 하는데.(김태형)

머츠(Mutz 2006, 57-87)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관점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의견에 설득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관점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훨씬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Mutz 2006). 이 점에서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에 대한 이견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타인의 관점을 허용하는 관용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가능성이 높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만나기 어려웠던 점과 실시간으로 뉴스, 캡처 화면 등으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점 때문이다. 또한 SNS를 통한 정보 교류는 양방향적인 특징으로 상대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뭔가 이렇게 되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단독방에서 얘기를 했어요.(임나연)

친구들 단독방 같은 데에 뭐 특정 후보의 논란이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가 낸 공약 가지고 ‘이렇게 냈대,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중략] SNS나 말로도 둘 다 했었던 것 같은데, SNS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중략] 유튜브 같은 것들 캡처해서 보내든가. 기사 캡처, 페이스북, 다 그냥 전체적으로.(김종인)

친구들과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를 공유할 때의 특징적인 점은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와 다르게 대선 후보의 공약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 정보보다는 사건, 사고와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공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은 특정 이슈를 매개로 친구들과 교류하는 특징을 보인다.

3) 교사의 정치적 중립으로 인한 교류 차단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대선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로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대선 및 대선 관련 정치 정보는 학생들과 이야기하기 민감한 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선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학교에서는 그 좀 선생님들이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치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박지효)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나 이런 정치인들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이야기에 들은 적이 없고요.(박서준)

다만 학생들은 학교 교사와 대선 및 정치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보를 교류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교사로부터 선거일에 투표하라는 독려를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2. 선거를 위해 수집한 정보 내용 영역 및 그에 따른 수집 경로

1) 학생 유권자가 선거를 위해 수집한 정보 내용 영역 및 정보원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거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학생들이 선거를 위해 수집한 정보는 크게 4개의 내용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학생들은 후보들이 내세우는 ①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고, 공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②공약 관련 전문 배경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그 외에 후보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③대선 후보자 관련하여 언급되는 이슈들에 대한 정보와 ④대선 후보자의 태도와 성품을 보여주

는 정보들을 구하였다.

학생들이 선거를 위해 수집한 정보의 내용 영역에 따라,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한 정보원은 달랐다. 우선 학생들은 공약에 대한 정보를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접하였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공약을 안내하는 공보물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온라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 공약을 정리해 놓은 블로그, 후보자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캡처본 등을 찾아 공약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공약 내용에 관한 전문적 배경지식의 경우, 온라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부모, 친구 등에게 묻는 것으로 나타난다. 온라인을 통해 배경지식을 구하려 할 때는 대개 전문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을 통해 정보를 찾는다. 셋째, 학생들은 대선 후보자를 둘러싼 이슈가 제기될 때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다. 끝으로, 학생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자의 태도를 대선 토론회 등 대선 관련 이벤트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 경우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중계되는 토론회 전체 내용이나 편집된 영상 콘텐츠를 살펴본다. 학생들은 대선 후보자나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이나 포털에 소개된 댓글 등도 찾아보았다.

2) 학생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보 수집 경로 및 과정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선거 관련 정보 접근 경험을 분석하면, 학생들이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에 접근한 경로와 정보 수집 과정은 다음의 3가지 경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 정보 접근 경로와 정보 수집 과정

	정보 접근 경로	정보 수집 과정
1	포털 검색	화제가 된 이슈나 사회적 사안에 대하여 직접 포털 등을 통해 검색하여 정보 수집
2	가족·지인 → 검색	가족·지인이 제기하거나 소개한 이슈를 듣고, 이에 대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종합적 판단
3	평소에 접하던 미디어 프로그램이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에 비의도적 접근	평소에 청취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평소 활동하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 포털 뉴스에 걸린 내용들을 접하게 됨

먼저, 학생 유권자는 선거 관련 정보를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하여 검색하여 알아보고 판단한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거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는 과정에서, 뉴스에 언급

된 사건 또는 사안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해 보는 과정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뉴스에 크게 크게 나왔던 사건들 그런 거가 핸드폰 보다가 그런 거 나오면은 또 궁금해지
는 게 있으니까 조금씩 찾아봤었어요. [중략] 저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는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김남준)

둘째, 학생 유권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이에 대하여 추가
적으로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찾고 판단한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부모, 조
부모 등의 가족은 선거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중요한 경로였다. 예를 들어,
부모, 조부모 등의 가족에게 선거 관련 챙겨보아야 할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거나, 공약이나 정책, 대선 후보 관련 사안에 대해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부모, 조부모에게 물어보고 정보나 지식을 얻었다.

처음에는 제가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도 저한테, 제가 투표권
이 있으니까 먼저 물어보셨거든요. 이런 거 보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
터넷 좀 찾아보고. 그리고 대선 토론을 몇 번 했었잖아요. 그것도 시간 나면 보고 가끔씩
보고 그랬어요.(유지민)

뉴스에서 들리는 공약들 보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쭙고.(강슬기)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모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정보
를 얻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모를 통해 접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 중 부모와의 대화가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고 설명하는 학생도 있었으나, 부모의 의견이 객관적인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학생도 있었다.

공약 그 자체의 객관적인 정보 말고 이거에 조금 뭔가 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역할을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여전히 이제 ‘객관적이다’라고는 말을 못 하지만 일단 저보다 이제 몇 십 년은
더 살아오신 분들이고, 이제 후보들이 말하는 그런 공약과 관련해서 직접 이제 겪어보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직접 겪거나 이미 겪었거나 뭔가 겪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사실 부모님과도 깊게 또는 오래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짧게, 짧게 대화를 할 때 그런 게 저의 생각에 일단 지지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본적인 어떤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김민정)

길 가다가 포스터에 이제 가장 주로 크게 적혀 있는 그런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기도 했었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사이트를 이용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정보는 아니어서. 저희 부모님이 객관적이신 분들은 아니셔가지고.(김지수)

셋째, 학생 유권자는 평소에 이용하던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선거 관련 정보를 접한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라디오 시사토크쇼, 텔레비전 뉴스, 학교로 배달된 신문 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고, 평소에 이용하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오가는 선거 관련 논의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경우 외에도, 선거철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평소 이용하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의도치 않게 선거 관련 정보를 얻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정보 습득에는 그렇게 막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사이트에는 비방글이나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그냥 별로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연구자: 커뮤니티를 방문해서 보고 이런 거는 뭐 또 이유가 있어서일 것 같아요. [중략] 지민 학생은 어땠어요?) 다른 거를 보려고 갔는데. 그 지금 대선 철이니까 다른 걸 보러 갔음에도 그 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봤던 것 같아요.(유지민)

하지만 다른 글을 보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갔다가 대선 관련 글이 많아서 보게 되었다고 설명한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예.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등)에서 접한 정보에 대해서 ‘비방글’이 많아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3) 선거 관련 정보 생산 주체에 따른 정보 종류 분류

학생들이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에 접근하게 된 경로를 정보 생산 주체와 정보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정보 생산 주체와 정보 종류

	정보 생산 주체	정보 종류
1	언론기관이나 방송사	온라인 정보 중 방송사나 언론기관의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 공식 소셜 미디어 페이지 등을 통해 발행되는 “공식적” 정보
2	개인(온라인 미디어 이용자)	개인이 큐레이팅한 선거 관련 정보(개인이 수집, 해석하여 공유한 정보)
3	개인(온라인 미디어 이용자)	개인이 생산한 정보(유튜브 영상 등)
4	정당 및 후보자	정당이나 후보자가 공약 관련하여 생산, 공유한 정보(소셜 미디어 게시물, 숏폼 영상, 정책제안 플랫폼 구축 등)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 중 많은 수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식적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하였다. 이때 학생들은 ‘공식적 정보’로 포털을 통해 접한 언론사가 발행한 뉴스이거나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를 꼽았다.

정당 채널 같은 건 안 보고. 그러니까 그대로 토론에 찍히는 방송사 채널마다 그 공식 홈에 들어가가지고 생방송 하는 그분들을 보고. 정당이나 아니면 뭐 일반인 유튜브나 이런 걸 잘 안 봐요.(전정국)

방송사나 아니면 좀 이름을 아는 신문사 위주로 보고 개인이 올린 영상 같은 거 웬만하면 보지 말고,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것도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너무 편향적이고 너무 한쪽 의견만 들어간 거고. 그게 정서상으로도 그렇게 막 좋은 내용이 아니고 막 욕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데에서 만든 콘텐츠나 이런 기사들을 챙겨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김석진)

그러나 학생들은 방송사나 언론사의 정보를 ‘공식적 정보’라 인식하면서도, 이들 정보 역시 정치적 성향을 지닐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공식적인 정보의 카테고리)가 사실 뭔가 너무 빠른 답인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일단 그 정당의 공식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정리된 공약집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방송사, SBS, KBS, 그런 방송사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방송 3사에 대해서도 댓글을 보면 뭔가 이제 ‘이 방송사는

조금 이쪽에 치우쳐져 있고, 이 방송사는 조금 이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구요.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공식적이다' 하면서 보니까는 알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거는 댓글을 통해서 '방송사들도 조금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뭔가 되게 신뢰가 있는 그런 방송사라 하더라도 일단 좀 여러 방송사를, 같은 내용이라더라도 여러 방송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김민정)

또한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각 언론사나 방송사를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지를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댓글 자체를 정보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가끔씩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다는 걸 들어가지고, 미리 알고 나서 그런 언론사들은 피하고 봤어요. [중략] 그냥 주요 언론사들 위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편향됐다'라고 느껴지면 그런 것들은 또 주요 언론사일수록 댓글이 많고 읽을 게 많다 보니까 읽다 보면 '아, 이게 조금 편향된 뉴스일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 반응 보면서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김종인)

둘째,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수집 중 대선 후보자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내용을 개인 이용자가 캡처하여 게시한 내용을 온라인에서 접하기도 한다. 대선 후보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직접 찾거나 연결하여 정보를 얻기보다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친구가 공유한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페이스북은 안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또 대선 후보자들 계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타임라인에 올리신 거 그게 또 캡처로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봤던 것 같아요. [중략] 트위터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계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올린 것도 보고,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올린 것도 보고, 그래서 그냥 다양하게 본 것 같아요. [중략] (대선 후보자 계정) 팔로우는 안 했는데 그 트위터라는 게 살짝 친구를 맺으면 그 친구가 공유하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보를 팔로우한 친구가 그걸 공유하고 그럼 그걸 제가 또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경로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유지민)

학생 유권자가 주도적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찾아나갈 때, 개인 블로거 등 다른 개인 미디어 이용자가 원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한 2차 정보를 찾아서 보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선 공약을 검색할 때도 나타났다.

공약은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제일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중략] 제일 처음에 봤던 공약 정보가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저는 블로그 정리해 뒀던 거 봤을 것 같아요. [중략] 개인이 정리한 거.(유지민)

그게 제가 이제 그냥 검색창에 무슨 후보 공약집 이렇게 치니까 뭔가 블로그나 이런 데 링크를 남겨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직접 정당 사이트를 찾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김민정)

이처럼 다른 미디어 이용자가 공유(큐레이팅)한 정보는 타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때 원본을 그대로 공유한 것인지 일부를 편집하여 공유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셋째,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개인 미디어 이용자가 생산한 정보를 접한다. 학생들은 선거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천 영상을 보았다. 학생 유권자들은 유튜브를 특히 대선후보자 토론 라이브 방송이나 편집본 등 영상기반 정보를 찾고 보기 위해 접근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튜브에서 대선 후보자 토론 편집 내용 보기를 선호하는 이유로 전체 토론회가 너무 긴 시간 진행되어 고등학생들이 운용할 수 있는 일정에 부적합함을 든다. 이 외에도 소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는 짧게, 시간 소비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짧은 길이의 영상정보는 많은 경우 편집된 정보라는 특성을 지닌다.

유튜브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거를 다 보지는 못했고 약간의 편집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이제 거기서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공약 같은 이런 정보에 관해서는 그런 공약집을 통한 글로 된 자료에서 얻고 내가 뽑는 게 어쨌든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관해서는 이제 오히려 토론을 통해서 조금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김민정)

넷째, 학생들은 공약과 관련하여 정당이나 후보자가 발행한 게시글이나 숏폼(short form) 영상, 정책에 대한 정치인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 게시글을 접한다.

페이스북이나 그런 곳에서 정치인들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스트, 그리고 정치인들이 올린 포스트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커뮤니티 등으로 받은 의도적으로 받은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김종인)

3. 수집 정보의 판단 기준

학생들의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판단 기준을 신뢰성, 공정성과 불편부당, 정확성으로 분석하였다. 판단 기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공정성과 불편부당, 정확성이 중첩되어 정보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1) 신뢰성

학생들은 수집한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의 제작 주체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한다. 학생들은 대선 후보자가 직접 출연한 영상, 지상파 3사 및 뉴스를 주로 다루는 주요 방송국의 뉴스나 영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정부 채널 등을 통해 접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의 경우, 틱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유튜브 숏츠(shorts) 및 유튜브 영상 등과 같은 전달 매체와 관계없이 후보자 자신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므로 학생들은 이를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한다. 즉, 후보자 계정의 SNS, 후보자나 정당 계정의 유튜브 영상 등은 후보자가 직접 출연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신뢰한다. 또한 학생들은 정부 운영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얻게 되는 정보 또한 신뢰한다. 예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운영의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를 공식적인 정보로 받아들여 신뢰한다.

학생들은 주요 방송국에서 제공되는 정보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말하는 주요 방송국은 지상파 3사를 말하며, 뉴스를 주로 다루는 케이블 채널이 포함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텔레비전을 통한 뉴스,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뉴스 등 전달 매체와 상관없이 주요 방송국 뉴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신뢰하는데, 이는 방송국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방송국에서 전달되는 내용을 '공식'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방송국이 굉장히 유명한 방송국이고, 또 잘못 전달하는 기자들 책임도 있으니까 잘못 전달했을 것 같진 않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후보들이 직접 올린 거니까 의심할 게 없었어요.(강슬기)

(후보자가) 직접 출연한 유튜브 영상은 봤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흔히, 요즘 흔히들 말하는 이슈 유투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진짜 인터넷 자료 베이스라고는 하지만 그 자료들

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런 것을 알 수도 없으니까, 출처를 알 수도 없으니까 그냥 무시를 하는데, 후보자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정책을 말하는 그런 콘텐츠적인 영상이 라면 그거는 믿습니다. [중략] 일단 간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겠구나. 다른 데 봐서 더 헛갈리기 전에 그냥 이걸로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박서준)

아무래도 공식 채널은 그대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지 내가 정말 어떻게 누구를 뽑을 건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공식 채널 같은 그대로 나가는 정보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전정국)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요 방송국에서 다루는 정보는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덧글'을 통해 방송사도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도 하였다.

반면,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개인 유튜버들이 제작하여 전달하는 정보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개인 유튜버들이 전달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접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데, 이는 개인 유튜버들의 영상이 주관적인 견해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지거나 임의 편집을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하는 영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목소리만 이제 더빙을 해서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덧글로 좀 논란이 많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게 좀. 네. 보기는 보는데 믿지는 않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라기보다는 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얘기가 주된 이야기고 그런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조금 알아볼 수 있었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거는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어서 뉴스는 있는 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김지수)

다른 사람들 올려놓은 거는 좀 가짜 뉴스라고 해야 돼요. 요즘에 그런 게 좀 문제가 많잖아요. 본인의 그런 의견대로 그냥 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들은 잘 안 보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박지호)

특히 학생들은 개인 유튜버가 익명성을 유지하며 내용을 전달하거나 정치적인 성향 등

이 드러날 경우, 유튜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판단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개인 유튜버가 다루는 정보가 2차 정보라는 점을 전제하고, 인식하여 신뢰하지 않는다.

2) 공정성과 불편부당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수집 시, 해당 내용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치우쳐지지 않는지,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었는지, 내용의 중립성을 유지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정보를 판단하였다. 즉, 정보의 균형성, 정보의 중립성, 정보의 의도 등을 기준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한다.

학생들은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거나 중립된 정보를 신뢰할 만한 정보로 생각한다. 반면, 정보가 한쪽 정당이나 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쪽 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꺾어내리는” 경우, 정보가 편향되었다고 판단하여 신뢰하지 않고, 본인도 편향된 시각이나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와 같은 정보를 경계하고 피한다. 학생들은 편향된 정보를 피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편향된 정보 제공 매체를 피하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보 등을 접하고자 한다.

뭔가 요즘 가짜 뉴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TV에 뜨는 그런, TV로 나오는 좀 중립적인 것들 위주로 보려고 했어요. [중략] 편향된 정보를 얻지 않으려고 같은 내용이어도 좀 다양한 매체로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뉴스 신문사들만, 뉴스 기사들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보고, 다음에 집에서 방송에 나오는 것도 보고.(김석진)

그냥 너무 그 사람을 너무 막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막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후보를 너무 막 이렇게 찬양을 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은 잘 안 믿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박지효)

아무래도 공식적인 이런 공약과 후보자들에 관련된 매체라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한 채로 ‘이 후보는 이 선거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후보자들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좋은 공약을 내놓고 ‘이런 후보자다’라고 해놓고 반대편에서는, 반면 다른 후보자들은 ‘어떠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꺾어내리는 그런 매체가 있었으면 저는 웬만하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박서준)

특기할 만한 점은 학생들은 주요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한 보도, 중립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요 방송국의 내용을 신뢰하는 기본 전제는 후보자가 직접 말한 영상, 양측의 입장이 모두 공평하게 다루어지는가의 불평부당이다.

뭐 KBS에서 토론을 했다. 방송 3사에서 했다. 그럼 거기서 한 하이라이트도 물론 편집자의 편집이 들어간 거지만, 그래도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거를 주로 봤습니다.(김태형)

TV 프로그램들 중에서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그게 제일 영향이 컸는데, 그게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는 KBS라서 좀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이렇게 한쪽 편,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떤 의원님이 나오시면 그 반대편에 '국민의힘' 의원님도 나오셔서 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요. 서로 약간 토론하는 식으로. 그래서 약간 양쪽 입장 다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들었고, 그게 제일 저한테는 영향을 준 것 같고요.(김석진)

학생들은 언론사의 기사나 영상 댓글을 통해 '편향된 뉴스'일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주요 언론사나 방송사의 기사를 '공식적',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보를 접하고 내용을 신뢰했지만, 댓글을 통해 주요 언론사나 방송사도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주요 언론사나 방송사 보도에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정보의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매체에서 보도되는 정보를 더 수집하는 노력을 한다.

그냥 주요 언론사들 위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편향됐다'라고 느껴지면 그런 것들은 또 주요 언론사일수록 댓글이 많고 읽을 게 많다 보니까 읽다 보면 '아, 이게 조금 편향된 뉴스일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 반응 보면서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댓글을 일부러 살펴본 거는 이 기사가 편향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보기 위함이었어요?) 네. 그런 위주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김종인)

방송 3사에 대해서도 댓글을 보면 뭔가 이제 '이 방송사는 조금 이쪽에 치우쳐져 있고, 이 방송사는 조금 이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공식적이다' 하면서 보니까는 알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거는 댓글을 통해서 '방송사들도 조금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뭔가 되게

신뢰가 있는 그런 방송사라 하더라도 일단 좀 여러 방송사를,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방송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김민정)

3) 정확성

학생들은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내용의 신뢰성 여부를 내용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틱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개인 SNS, 개인 블로그, 개인 유튜버 등이 게시하는 영상 등에서 접하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하는 반면, 뉴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학생들은 개인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의 경우, 정보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거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얻는 정보는 신뢰하지 않거나 원천적으로 정보를 얻지 않으려고 한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이슈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진짜 인터넷 자료 베이스라고는 하지만 그 자료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런 거를 알 수도 없으니까, 출처를 알 수도 없으니까 그냥 무시를 하는데.(박서준)

조금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만 애초에 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분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애초에 정말 기사나 그렇게 그런 자료들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병적일 정도로 특히 유튜브에서는 일반 그런 사람들이 올려놓은 영상은 보지 않았어요.(김민정)

대부분의 학생들은 뉴스 등에서 전달되는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했지만, 면담에 참여한 한 학생은 뉴스 등도 정확성을 기준으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한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이거나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는 보도 내용의 경우 신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거나 기자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경우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저는 주로 물증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뢰하는 편이라. 누군가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가 생각하는 정황이라든지, 합리적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았고요. 진짜 딱 명시적으로 드러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믿었던 것 같아요.(김태형)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를 보지 않으며, 우연히 접하더라도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를 접했다고 언급한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특성상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4. 투표 참여와 이유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 투표 또는 당일 투표를 통해 모두 대선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를 하게 된 계기로 책임감과 의무감, 첫 대선 투표에 대한 기대감, 투표권에 대한 권리 등을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면담 참여 학생들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교내·외 학습을 통해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였으며, 학교 교사, 부모 등을 통해 국민으로서 투표권의 행사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18세 유권자로 투표권을 부여받게 된 과정이 쉬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생애 처음 주어진 투표권에 대해 책임감과 투표권 행사에 대한 의무감을 느껴 투표에 참여하였다.

계속해서 나라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첫 투표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최대한 잘 써야겠다는 책임감이 가장 컸습니다.(김종인)

사실 제가 (18세 대선 투표) 최초이기도 했고. 그전에는 없었던 전례니까. 권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시고 투쟁을 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거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3이 투표를 할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좀 ‘제가 이런 권리를 얻었을 때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이제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의무는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셔서지고 그런 영향도 없잖아 받았던 것 같아요.(김지수)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인에게 생긴 생애 첫 투표권이기 때문에 투표에 대해 기대하

고, 자신의 기대에 대한 부응으로 투표를 하였다. 학생들은 ‘생애 첫 투표’로 처음으로 ‘유권자가 되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하였고, 이 점이 실제 투표행위로 이어졌다.

특별한 이유는 첫 투표니까, 투표할 기회가 생긴 게 처음이니까. 그래도 첫 번째로 하는 투표는 해야 다음에 투표할 때 더, 더 현명하게 투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첫 번째로 하는 투표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강슬기)

제 주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죠.(김태형)

학생들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으로써 투표권을 부여받은 자신을 18세 유권자의 대표로 생각하고 투표를 하였다. 학생들은 친구들 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이고, 다른 친구들보다 생일이 빨라 선거권을 갖게 된 자신이 청소년의 대표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점에서 10대로서 대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면담에 참여한 한 학생은 10대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 위해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10대들도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이고, 이런 문제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투표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제 투표를 안 하면은, 그냥 저에 대한 그런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뭔가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됐어요.(박지효)

처음으로 주어진 권리니까. 지금 저랑 동갑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못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데, (투표를) 안 하기는 좀 아깝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유지민)

찾아보니까 10대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제 10대에게 투표권을 쥐어주면서 뭔가 그 어른들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뭔가 충분히 성장했고 투표권을 줄 필요가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직은 좀 미성숙하니까는 이 나이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금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김민정)

이처럼 학생들에게 제20대 대선 투표 참여 경험은 주권 행사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이기도 하였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고3 학생들이 헌정사상 첫 대선 투표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선 정보 및 정치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고3 학생들이 선거를 위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은 학생이 혼자 1차 정보를 찾고 그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개입하는 사람(가족, 친구 등)이 있고, 또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경로로 정보를 찾는 등 복합적인 과정을 거쳤다. 특히 학생들은 온라인이나 정보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가족, 친구, 온라인 지인을 통해 어떤 정보나 이슈가 있으니 찾아보라는 등 사람을 통해 이슈에 매개되기도 하였으며, 선거와 관련된 정보 중 공약 등 전문적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징적인 점은 학교 교사와의 정치정보 수집 교류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정치정보 교류나 취득 경로가 주로 가족이나 친구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이지영 외 2022; 이창호 2020)와 일치하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미디어를 통한 참여 경험이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이창호 2021; 이성진 외 2021; 권예지 외 2021; 류영철 2021; 한숙희 외 2021)와도 유사하다.

한편,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이 만든 정보는 편향적일 수 있는 정보로, 레거시 미디어나 공기관에서 발행한 정보는 '공식적' 정보로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 정보를 만드는 사람의 주관적 의견, 태도, 정치적 성향 등이 기초가 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댓글의 성향 등을 통해 검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식적' 정보라 명명한 레거시 미디어에서 습득하는 정보나 공식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나 검토가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전달받는 정보 역시 언론사나 방송사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 또는 당일 투표를 통해 모두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참여 이유는 투표에 대한 책임감

과 의무감, 첫 대선 투표에 대한 기대감, 투표권에 대한 권리 등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이론적 인과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볼 때, 고3 학생 유권자들은 가족, 친구들과 선거 정보 및 선거 관련 정치정보에 관한 교류 활동을 하지만 학교 교사와의 교류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 부재하였고, 가족, 친구 등과 정보 교류 및 영향이 미디어 등과 매개하여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 또한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이론적 인과 모형’(Lee et al. 2013)에서 시민적·정치적 참여에 의사소통(communication)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된 것과 달리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가족, 친구, 학교 교사와 제한된 의사소통으로 깊이 있는 의사소통 활동은 미약하였고, 학교에서의 토론·토의 활동 등의 의사소통 활동은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유권자 경험 탐색을 위해 설계된 질적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정보 수집과 투표 경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18세 유권자들의 특징에 대한 이해 제공뿐만 아니라 이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및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투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부재한 부분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대선 정보 및 대선 관련 정치정보를 수집하면서 가족, 친구, 학교 교사 등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였으나 이와 같은 교류는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선거 및 정치 정보가 ‘민감한 정보’라는 인식에 더해 선거 및 정치와 관련된 교류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사와의 투표 참여를 독려받는 것 외 정치정보 관련 교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이 이유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가족, 친구, 학교, 미디어는 학생들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논쟁과 의견의 일치 및 불일치 경험 등을 통해 길러진 의사소통 역량은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Lee et al. 2013). 하지만 본 연구 결과, 가족 간 선거 및 정치 관련 교류는 일방향적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또는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민감한 주제라서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고, 학교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하여 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목소리가 전혀 없는 무성공간(無聲空間)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여러 사람과 정치적 정보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부재와 이 부재로 인한 시민성 발달의 저해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가족, 친구, 학교 교사들과 정치 정보

및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육 차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통한 시민성을 형성할 기회 및 정치, 선거 관련 의견 교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의사소통 역량과 시민성은 단기간에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 점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정치 대화의 필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창호(2020)는 학생들의 시민성 증진 및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정치토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정치토론의 일상화를 강조하였다. 일상적인 정치 대화를 통해 정치 관련 주제가 민감한 주제라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상준(2020)은 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치 쟁점에 관한 토론, 공약을 검증하는 방법, 모의선거, 학생 선거운동 관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교육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가 제안한 교과서 내용을 고려하여 사회 교과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정치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과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공식적 정보’로 받아들이며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학생들은 개인이 만드는 정보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는 것에 반해 언론사나 방송국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어 판단해야 하는 영역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 정보 사용이 학생들의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Lee et al. 2013),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 판단 기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정보의 특성이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교육적 지침(guideline)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학교 안에서 미디어 및 디지털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탐색한 고3 학생 유권자의 선거 경험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장(場)이 부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이론적 인과 모형’ 중 마지막 단계인 대화를 통한 정보 결합과 의견을 형성하거나 교환하는 과정이 부재하였다. 연구 결과, 고3 학생 유권자는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 표면적인 정보 교류와 대화만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관점에 대한 노출은 관용적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되며(Mutz 2006),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은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Lee et al. 2013)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정치적 견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현실에서는 이 지점이 부재하다. 이 점에서 학생 유권자의

64 선거연구 제18호

투표라는 정치 참여 행동은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의견화 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하고,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정치정보 교환이나 정치 의견을 교류하고 시민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 고 · 문 · 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 2019. “경기도 고등학생의 정치 및 선거에 대한 인식.”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 3. 1-4.
- 경기도교육청. 2022. 『학생 유권자 수 관련 내부자료』. 경기도교육청.
- 공직선거법. 2020. “법률 제18837호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25#P15>(검색일: 2023.3.3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LSW/main.html>(검색일: 2023.4.28).
- 권예지·이지영·양소은. 2021. “소셜 뉴스 이용과 뉴스 관여가 세대별 정치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5-1. 5-34.
- 김아미·김아람. 2019. 『Z세대는 연예인 학교폭력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고 소비하는가』.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지혜. 2014.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섯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43-1. 111-130.
- 김효연. 2016.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헌법연구』 3-1. 137-163.
- _____. 2018. “‘19세 미만’ 청소년의 6,13 지방선거 참여보장 — 선거권연령 하향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1. 199-226.
- 두산백과. n.d. “스윙보터(swing voter).”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51838&cid=40942&categoryId=31651>(검색일: 2022.4.14).
- 류영철. 2021.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고3 학생의 정치의식 및 선거행태 분석.” 『동북아연구』 36-2. 67-109.
- 민법. 2021. “민법 법률 제17905호 제4조(성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26&lsiSeq=228813#0000>(검색일: 2023.3.30).
- 민영. 2022. “연령과 세대의 교차: 21대 총선에서 노년층과 청년층의 투표 선택 요인.”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67. 37-73.
- 박상준. 2020.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3-1. 121-140.
- 손정희·김찬석·이현선. 2021. “M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고유 특성에 대한 각 세대별 반응 연구 —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7. 202-215.
- 손현경. 2022. “‘스윙보터’로 떠오른 10대 유권자…98만 명 표심 어디로.” 『이투데이』 2022/3/7.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1855>(검색일: 2022.4.14).
- 안석·기민도. 2021. “고3 우습게 보다 대선 망친다…유권자 50만 명 ‘치열한 쟁탈전.’” 『서울신문』

- 2021/12/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8006001&wlog_tag3=daum(검색일: 2022.4.14).
- 양소은. 2020. “시민 발달 기회로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수연. 2018. “Z세대를 주목하라.” 『마케팅』 52-1, 57-62.
- 이동후. 2010. “제3의 구술성: ‘뉴 뉴미디어’ 시대 말의 현존 및 이용 양식.” 『언론정보연구』 47-1, 43-76.
- 이성진·김응표. 2021. “청소년(만 18-19세) 유권자의 정치 정보 이용행태와 정치효능감이 투표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21-10, 344-355.
- 이지영·김아미·이윤주. 2022. 『고등학교 정치·선거 교육의 실태』.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창호. 2020.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21. “고3 유권자의 정치참여 실태 및 요인: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14, 61-84.
- 이후연. 2022. “교복 유권자 “투표는 축제”...‘16세에도 투표권’ 찬반 이유 보니.” 『중앙일보』 2022/3/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397>(검색일: 2022.4.14).
- 정민영. 2022. “〈잠망경〉 20代 대선, 학생유권자 뺏다.” 『주간교육신문』 2022/3/11. <http://www.edu-week.com/news/view.asp?idx=16745>(검색일: 2022.4.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숫자로 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https://nec.go.kr/site/lvt/ex/bbs/View.do?cbIdx=1507&bcIdx=175973&relCbIdx=1147>(검색일: 2022.4.14).
- 한숙희·조아미. 2021. “청소년의 첫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28-4, 63-87.
- 행정안전부.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는 총 44,197,692명—시·군·구 누리집에서 등재 번호, 투표소 위치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2/27.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0740(검색일: 2023.4.27).
- 홍소희·김민. 2021. “MZ세대 특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메소드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24-1, 113-120.
- Gaziano, Cecilie and Kristin McGrath. 1986. “Measuring the concept of credibility.” *Journalism quarterly* 63, No.3. 451-462.
- Lee, Nam-Jin, Dhavan V. Shah, and Jack M. McLeod. 2013. “Processes of political socialization A communication mediation approach to youth civic engagement.” *Communication Research* 40, No.5. 669-697.
- Levinson, Paul. 2009. *New new media*. Boston: Allyn & Bacon.
- Meyer, Philip. 1988. “Defining and Measuring Credibility of Newspapers: Developing an Index.” *Journalism Quarterly* 65, No.3. 567-588.
- Mutz, Diana, C. 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0511617201

Sundar, S. Shyam, 1999. "Exploring receivers' criteria for perception of print and online new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 No.2. 373-386.

Sundar, S. Shyam and Clifford Nass, 2001. "Conceptualizing sources in online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1, No.1. 52-72.

투고일자: 2023년 3월 31일, 심사일자: 2023년 4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15일

[Abstract]

Exploration on First Time Voters' Political Information Gathering and Voting Experience in the 20th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Lee, Jee Young |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Sohn, Dajung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Kim, Amie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high school senior students experienced the presidential election, focusing on their voting experiences and political information collection. To this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high school senior voters, and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theorized casual model of communication mediation for youth civic engagement' and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As a result, this study argues that high school senior voters mainly exchange politic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However, the information shows a one-way flow and is not discussed in depth due to its sensitive aspect. In the process of students acquiring information, people (family, friends, etc.) intervene in their judgment. Additionally, their information-gathering processes show its complexity, such as finding information on the same issue in different ways. On the other hand, students accept information created by individuals on social media as potentially biased information, and information published by legacy media or public institutions as an "official" one.

The study suggests that students need opportunities to exchange political information or opinions with many people, and they also need educational support to construct critical views on how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Ultimately, for students to become active participants in civic events,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a public sphere where they can actively share political information and form opinions on the subject.

-
- Keyword: High school student voters, youth voters, election, political information, presidential election

선거 여론조사 뉴스 리터러시 향상 방안 도출을 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도 내용분석*

정일권 | 광운대학교**

진보래 | 중부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권자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일간지 기사를 분석했다. 전국 일간지 10개사와 지역 일간지 9개사의 온라인 기사 1,477건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기사 제목의 특징과 해석 보도의 유형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선거 여론조사 보도 시 과거에 지적되었던 오차범위 해석의 오류나 조사 출처 및 개요를 명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대체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듯 지지율 수치를 중심으로 순위, 차이, 추세만을 강조하는 경매중계형 보도는 여전히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대부분의 보도는 결과 수치를 나열하고 최소한의 1차적 해석만을 제공하며, 2차적 해석의 경우도 따옴표 해석과 혼수두기, 그리고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조장하는 내용이 주요 특징이었다. 물론, 소수 보도의 경우 선거나 정치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는 대안적 해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매중계형 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보도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수용자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가 언론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데 유용한 조언인 동시에 뉴스 수용자에게는 좋은 뉴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여론조사, 선거, 뉴스, 리터러시, 저널리즘, 경매중계형 보도, 20대 대통령 선거

* 이 논문은 2022년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재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한국언론진흥재단-지정 2022-03)과 제1저자의 2022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제1저자, jeongik@kw.ac.kr

*** 교신저자, bjin23@joongbu.ac.kr

I. 서론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국내 언론에 처음 등장한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이제 선거 뉴스의 필수 분야로 자리 잡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기준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만 1,131건이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유행은 수용자의 높은 관심과 반응, 탈정형화된 기사 쓰기의 여지와 기자의 개성 표출 욕구, 상대적으로 저렴한 취재비, 취재의 편의성, 조사기관의 증가, 뉴스 포털을 통한 배포의 편의성, 소셜미디어를 통한 영향력 확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Cappella and Jamieson 1997; Daoust et al. 2020; Patterson 1993). 그러나 실증 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양승찬 2007; Beckers 2021; Chia and Chang, 2017). 보통의 수용자들은 기사에 함께 공표되는 조사 관련 정보만으로 스스로 질 낮은 정보를 걸러낼 수 있을 만큼 관련 분야 리터러시가 높지 않다(김연수 외 2007; 정일권 외 2018). 따라서 언론사는 수용자를 대신하여, 어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정보로 활용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게이트키퍼 활동을 충실히 해야 한다(정일권·김상연 202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65%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김위근 2021). 그러나 여론조사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7%,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63%였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62%는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요약하면,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유권자 관심의 크기에 비해 신뢰도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낮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일반 유권자의 불만은 선거 결과와 불일치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조사 결과 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언론의 비전문성과 편향성으로 요약된다. 보도에 초점을 맞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언론이 조사방법 상의 한계를 감추고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는 것, 이슈 보다는 후보 간의 우열만 강조하는 경마중계형 보도(horse-race coverage), 그리고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권혁남 1991; 양승찬 2007; 정일권 2017; Beckers 2021; Chia and Chang 2017).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가 언론의 나태함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언론의 계획적 행위라는 비난도 존재한다(Chia and Chang 2017; Price and Stroud 2006).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불신은 시민들이 여론조사 응답에 참여하려는 의향을 저하해 표본의 대표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언론 공표 제한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Kim et al. 2011).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고 보도를 통해 언론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 언론사가 스스로 현재의 기사작성 방식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 제공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언론 윤리를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Beckers 2021; Searles et al. 2016). 로젠시엘(Rosenstiel 2005)에 따르면, 뉴스룸 축소, 2차 자료 재가공의 강조 및 24시간 뉴스 요구 등과 같은 저널리즘 생태계의 변화는, 한때 출판용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겼던 여론조사 정보의 뉴스 가치를 높였다. 또한, 뉴스 매체가 증가하면서 청중을 향한 경쟁이 격화되었고, 저널리즘의 윤리보다는 마케팅 가치를 위해 여론조사를 이용하려는 동기가 강화되면서 선거에 대한 곁핍기식 이해에 머무르는 기사가 늘어났다. 미국의 경우, 여론조사 종합 웹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언론사들은 개별 여론조사를 통해 게이트키퍼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여론조사를 둘러싼 새로운 현실에 전통적인 언론기관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내몰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Toff 2019).

여론조사 보도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대부분 공급자인 언론사를 제어하기 위해 저널리즘 규범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취하거나 제도나 법적 조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해 왔다. 이는 생산 과정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언론은 시장 즉 수용자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에 수용자가 순위 위주의 보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편향적 보도를 원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힘든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생산 과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좋은 품질의 뉴스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통계적 지식이 요구되는 여론조사 뉴스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는 보통의 수용자들이 선거 여론조사 뉴스를 소비하면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고 뉴스 내용 중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뉴스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I. 문헌 연구

1. 선거 여론조사 보도 문제 유형별 리터러시

여론조사 보도의 효과는 유권자가 조사 결과에 직접 노출된 결과가 아니라 이를 보도한 기사에 노출된 결과다(Ansolabehere and Iyengar 1994). 따라서 여론조사 자체보다는 그 결과를 보도한 기사의 품질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불편부당성, 객관성과 같은 저널리즘적 원칙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가 품질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권혁남 1991, 2002; 김경모 외 2010; 송병권 2019). 권오근(2006)은 조사방법과 관련된 정보 부재의 문제점과 함께 보도의 전반적인 공정성과 객관성, 제목의 선정성, 분석의 편향성, 그리고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두원(1996)은 방송 뉴스를 분석한 후, 방송인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잘못된 방송 언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수용자들이 결과를 편향되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오차범위 내 차이에 대한 해석 오류(권혁남 2002; 양승찬 2002), 타 언론사 인용 보도 시 통계 수치 해석의 오류 등이 지적된다(양승찬 2002).

지적된 사항들을 모아 재분류하면, 담당 기자의 통계적 전문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경마중계형 보도 등 흥미성 위주 보도의 문제, 그리고 편향적 보도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의 정도에 따라 수용이 불가능한 뉴스와 수용에 주의를 요하는 뉴스로 구분할 수도 있다. 조사방법과 언론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통의 수용자가 뉴스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의 정도를 판단하는 리터러시를 갖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별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

1) 통계적 오류

오차 범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 차이에 대해 과다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그래프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자 간 차이를 강조하는 보도는 모두 통계 지식과 상치된다(양승찬 2002; 정일권 외 2014; Larson 1999).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기자가 통계적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안 하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통계적 혹은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정보가 수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기자는 직업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벗어

날 수 없다.

기자는 단순히 지지율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세 정보를 더 엄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응답률이 낮은 조사, 동일 대상, 동일 시점의 조사 중 반복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조사, 특정 계층의 가중값이 지속적으로 높은 조사 등은 추가 검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보도 여부를 결정하고, 보도 시에는 조사 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기사 내용에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타 언론사나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는 해당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를 제시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가정하지 않고 조사 품질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질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시기에 상관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에 국한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500명 미만의 여론조사는 언론이 보도할 수 없도록 최소 표본 수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언론은 이에 더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의 적절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보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 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단순히 공표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보도할 뿐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검토하지 않는다(김용호 외 2015). 그렇다면 언론 대신 수용자가 직접 이런 정보를 통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 쉽지 않다. 이 정도의 리터러시를 지니려면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을 지녀야 한다.

2) 경마중계형 보도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는 다양한 형식의 보도, 예컨대 후보자 간 지지율 차이를 도표로 제시하는 기사,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기사, 선거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비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기사, 관련성 높은 반대 자료를 무시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의 공통

점은 후보자들의 지지율 순위만이 중요한 경마중계형 보도(경마 보도)라는 점이다(Broh 1980). 경마중계형 선거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예: Broh 1980; Cappella and Jamieson 1997; Iyengar et al. 2004; Patterson 1993). 한 마디로 경마 보도는 민주주의 선거운동의 기능을 약화시킨다(Rosenstiel 2005). 후보자의 단순 지지율이나 그들의 지지율 순위에만 주목하는 유권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 해석보다 단순 지표에만 관심을 두기에 결과적으로 애초에 지지했던 후보 대신 당선될 가능성이 큰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게 된다(권혁남 1991; 양승찬 2007; de Vreese and Semetko 2002; Patterson 2005; Price and Stroud 2006). 또한, 경마 보도는 승자에 대한 투표만 의미 있다는 인식을 강화해 선수가 아닌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율을 낮추고(이강형 2002; Lavrakas and Traugott 2000), 정책 관련 정보를 뉴스에서 소외시키며(권혁남 1991),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불신감을 높여 정치 냉소주의를 강화한다(이강형 2002; de Vreese and Semetko 2002; Patterson 2005; Price and Stroud 2006). 게다가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정확한 선거 결과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 없이 판세를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어 공중 담론 행위가 줄어들고(Lavrakas and Traugott 2000), 정치 집회 참여와 같은 선거 참여 활동이 줄어든다(권혁남 1991; 양승찬 1998; 이강형 2002).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의 속마음과 투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유럽 국가는 선거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거나 보도에 제한을 두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 신문 편집인들이 자율적으로 선거 결과를 예상하는 내용이나 수치를 삭제하기도 한다(Meyer 1993).

한편 경마 보도의 부정적 효과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Meyer and Potter 1998; Zhao and Bleske 1998). 이들은 경마 보도의 폐해로 알려진 유권자의 이슈에 관한 관심 저하가 실증연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우와 동료들(Daoust et al. 2020)은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가 여론조사에 노출되는 것은 투표 참여 또는 기권 여부는 물론 지지자를 변경할 가능성과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경마 보도가 늘어날 때 이슈 보도도 증가한다거나(Patterson 1980), 경마 보도를 많이 본 사람이 이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기도 한다(Meyer and Potter 2000). 게다가, 경마 보도가 다른 보도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지금과 같이 지면의 물리적 한계가 사라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뉴먼(Neuman 1996)은 유권자가 이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권자가 그런 정보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선거 관련 기사 중에서 이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실질

적인 정보는 수용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yengar et al. 2004). 쟁점 사항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공약은 캠페인 기간 내내 거의 변화가 없기에 시간이 지날 수록 뉴스 가치가 떨어지지만(Iyengar et al. 2004), 지지율은 조사 때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경마 보도는 늘 새로운 정보를 담는다. 후보자 간 지지율 차의 축소나 순위의 역전은 수용자의 관심을 끌고, 이는 구독률과 열독률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언론사는 조사기관과 협업하여 선거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뉴스 소재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취재가 쉽다는 이점을 지닌다(정일권 2014). 수용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취재 기자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방법이 선거 여론조사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수익성과 영향력만을 고려하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언론사에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경마 보도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경마 보도가 선거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Traugott and Lavrakas 2000), 선거 관심은 관여도로 이어진다(Gallup 1978/2002). 실제로 경마 보도는 유권자의 재정적 후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부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지지율을 보고 누가 승리할지에 대해 확신하게 되어 정치적 투자처를 결정하기도 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열세에 놓인 점을 안타깝게 여겨 후원하기도 한다(Mutz 1995). 두 경우 모두 최종 결정에 대한 단서를 경마 보도에서 찾는다.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인한 후에 실제 행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마 보도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마 보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이를 현명하게 이용하지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정일권 2017; 정일권·김상연 2021). 선거 보도에 경마 보도를 포함하여 일단 유권자의 시선을 끈 뒤에 추가로 이들에게 공약과 정책적 입장 등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스포츠나 연예 프로그램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한 후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공약을 설명하는 전략을 사용할 때 유권자들이 더 집중하는 결과를 얻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실제로 경마 보도를 접한 유권자는 선거와 관련된 다른 주제의 뉴스로 관심이 확장하고, 그 결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과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지식도 늘어날 수 있다(Zhao and Bleske 1998). 이런 측면에서 경마 보도와 관련한 리터러시는 경마 보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경마 보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어야 한다.

3) 해석의 편향성

편향적 기사는 수용자를 자극하고 화제성이 높다. 주의를 환기하고 댓글이나 퍼나르기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다. 따라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는 기사에서는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가 유의미한 격차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양승찬 2002/2007).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당선에 유력한 것처럼 다루기도 하고 약간의 지지율 하락이 ‘급락’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과장이고 선정적이지만 독자의 시선을 끌기에는 효과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과학적’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이고 편향되지 않았다고 맹신하기 쉽다. 그러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는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Bhatti and Pedersen 2016; Meyer and Potter, 1998). 그러나 실상은 선거 여론조사가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선정적 보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편향적이라고 비난받고 있다(김선호 외 2021). 언론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비난의 핵심이다(양승찬 2007; 정일권 외 2014). 구체적으로, 후보별 보도량의 불평등, 비과학적 분석, 편향을 유도하는 해석과 설명, 주관적 혹은 편향적 용어의 사용, 사진이나 인터뷰 등의 보조 자료를 이용한 은밀한 불평등이 지적되었다(권혁남 1991; 김경모 외 2010; 양승찬 2002; Lavrakas and Traugott 2000). 선거 보도와 관련하여 편향성 혹은 중립성 위반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때면 우리나라 언론은 으레 유력 후보자나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 대해 보도의 양을 통일하고, 대립하는 견해들에 대해 비슷한 비율로 보도하고, 편향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표현, 즉 특정 후보에 득 혹은 실이 되는 해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양승찬 2007; 정일권 2014). 그러나 이처럼 외형적 혹은 산술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논란에 휘말리거나 특정 진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피하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만 유권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정일권 2017).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한 편향성 시비는 보도하는 조사의 선택에 관한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최근 들어 조사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줄어드는 추세다. 더 많은 경우는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최근 들어 선거 여론조사 보도 내용 중에서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깊다. 해석을 강화한 저널리즘(interpretive journalism)의 필요성은 이미 1930년대에 제기되었다(Fink and Schudson 2014). 언론은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Stephens 2014). 이러한 관점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한 시민

(informed citizen)이 정치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해석적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명확한 지침으로 두고 있는 언론사도 있다. BBC는 여론조사 보도 편집 가이드라인에서 “단순히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만 가지고 뉴스 방송이나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들이 선거 여론조사 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뉴스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사는 수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에 설명과 맥락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기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용자가 스스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리터러시가 부족함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김연수 외 2007; 양승찬 2007; Bhatti and Pedersen 2016).

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철저히 객관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주관성이 개입될지라도 정보의 분석과 설명을 곁들이는 해석적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결과의 단순 기술을 넘어 분석과 해석을 추가한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박현진·정일권 2018). 여론조사를 활용하여 지지율 변화를 감시하고 그 정보를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유권자들의 식견을 늘이거나 정치 참여를 끌어낼 수 없다. 또한, 언론의 사회적 가치와 뉴스의 품질이 수용자의 알권리 충족 기여만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다. 여론조사 보도의 주목적은 당선자 예측이 아니라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권혁남 1991; 양승찬 2007; 정일권 외 2014).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신뢰성이 높은 해석을 ‘1차적 해석’ 그리고 낮은 해석을 ‘2차적 해석’으로 구분해서 논의한다. 1차적 해석은 결과 수치를 언어로 풀어낸 것이다. “차이가 오차 범위 안이다/밖이다”, “지난번 조사에 비해 1위와 2위의 차이가 줄었다/늘었다”, “2위와 3위가 단일화하면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없다” 식의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를 해독할 능력만 있으면 같은 결론을 내리는 분석의 일관성, 즉 신뢰도가 높은 분석 결과로 해석자 간 차이가 작다. 여론조사 보도는 대부분 1차적 해석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담론 투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사에 나타난 결과 해석과 보도의 방식에 주목해 왔다(송병권 2019; 박현진·정일권 2018; 정일권·김상연 2021; 정일권 외 2014).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표현되고, 언론사들이 편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취사선택한다고 보는 등 조사 자체보다는 보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가 되어 왔다.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과학적 분석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2022)가 제시하는 기준 즉,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준수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사실적인 차이’로 오인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선거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자체 조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도하는 경우에도 지지율을 헤드라인에 노출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조사 시점이 유사하거나 조사 회사가 같은 조사들을 모아서 결과 수치의 차이나 변화를 분석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해석적 기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특히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조사 방법, 조사 시점, 응답자의 구성, 조사 문항 등 구체적인 사안이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단순히 비교하여 A 지역보다 B 지역이 더 지지율이 높다거나, A 시점에 비해 B 시점에 지지율이 상승 혹은 하락했다는 해석은 엄밀한 통계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해석 기사의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지지율을 파악하도록 하는 그래프 제공을 자제해야 한다. 이것은 수용자들이 현실을 잘못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분석하고 이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수준의 해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치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심층적인 해석 보도가 필요하다(Broh 1980). 이렇게 조사 결과 수치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분석하거나 그 결과로 유추되는 유권자의 바람을 설명하는 기사가 2차적 해석 기사다. 이 유형의 기사에서는 누가 앞서고 얼마만큼 앞서는지를 분석하는 대신에 왜 앞서는지, 캠페인 전략이 적절했는지,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후보자와 유권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해석이 강조된다. 1차적 해석과는 달리 해석자에 따라 해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거와 논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수용자의 리터러시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다.

해석을 위주로 한 기획기사는 흔히 ‘5W1H’라고 부르는 기사의 기본 구성,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중에서 ‘왜’에 초점을 맞춘다(Falasca 2014; Larson 1999).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형성 및 행동 선택에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과 지지율을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것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지지율 변화와 다른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해서 이를 수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지지율 나열과 당락 예측이 아니라, 왜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는 데 힘쓰는 것이다(Falasca 2014;

Larson 1999). 이 유형의 해석에서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은 선거 상황을 널리 알리는 ‘중계자’가 아니라 선거와 정치 과정에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응원단장’이다(정일권 · 김상연 2021). 언론은 조사 결과에 드러난 관세 정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활용하여 정치인과 유권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생산하는 임무를 지닌다. 예를 들어,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자 토론회 같은 이벤트를 연결해서 분석하고 토론의 내용과 지지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보도가 그러하다. 언론은 선거 여론조사를 근거로 활용하여 정치 및 선거 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의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1차적 해석이든 2차적 해석이든 해석이 많을수록 수용자들의 기사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사는 길어진다. 그러나 1차적 해석과는 달리 편향성 논란에 휩쓸리기 쉬운 것이 2차적 해석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통의 유권자는 조사방법과 정치적 맥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해석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리터러시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특정한 단서를 보고 해석의 적절성을 유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단서가 무엇일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거의 없다.

2. 데이터 활용 뉴스 리터러시

뉴스의 영향력은 수용자의 뉴스 이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수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뉴스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의미를 지니지 못한 ‘죽은 뉴스’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에서 뉴스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인 뉴스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의 편향성을 인지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사 수용 능력, 다양한 뉴스 정보원에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뉴스 교육에 대한 결과물로 달성된 뉴스 소비 능력과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정훈 · 이두황 2013). 비록 선거 여론조사에 초점을 맞춘 리터러시 연구는 없지만, 데이터 활용 뉴스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들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데이터 활용 뉴스는 객관성 강화와 정보의 정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미 20세기 초부터 보도되었고 비중이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활용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뉴스가 다른 형태의 뉴스에 비해 객관적이고 정확하므로 뉴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품질이 향상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데이터라는 우산 아래 진실에 대한 왜곡과 편향이 더 정교하게 이뤄지는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다(정일권 외 2018; 황용석 2000).

데이터 활용 보도는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의 정밀성에 바탕을 두고 언론 활동을 보강하려는 정밀 저널리즘이 구현하는 방법으로 채택되었다(Howard 2014/2015).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집, 배포하는 설문조사나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 공적 형태의 데이터가 자주 활용되었다(최선열 1990).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보도는 복잡한 사회 현황과 변화 상황을 독자에게 명료하게 전달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이승선 2008; 최선열 1990; 황용석 2000).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의 신뢰성과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자체는 타당하더라도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데이터 제공 기관을 우호적으로 다루는 편파성이 나타난다는 비판이 뒤를 잇는다(이완수·노성종 2011). 편파성의 문제는 객관성 혹은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큰 틀에서는 유사한 의미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 보도의 문제 즉, 데이터 해석의 낮은 신뢰성과 편파성의 원인으로는 언론사 내부의 역량 부족과 언론과 외부 기관의 공모적 관계가 지적되었다. 언론사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뉴스 생산 조직과 주체들의 부족한 통계 지식, 데이터의 편향적 취사선택, 분석의 부정확성과 해석의 임의성과 의도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 걸쳐 계속 제기되어왔다(이부일 외 2010; 황용석 2000).

기자의 부족한 통계 지식은 데이터의 오분석을 야기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기사작성에 오류를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기사작성의 오류는 언론의 의도가 개입된 의도성 문제와 언론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의도성 문제로 구분된다(이승선 2008; 황용석 2000). 의도성 문제는 시청률 또는 구독률과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자 선정적 소재를 채택하는 경우, 또는 흥미 위주로만 혹은 감정적 분석이나 편향적으로 시각화하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 비의도성 문제점에는 주로 기자의 통계적 지식 미비로 인해 통계자료 제공자의 일방적 해석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스스로 분석은 하되 그 내용이 틀린 경우,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그래프 작성과 제시 등이 해당한다.

언론사의 내부 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기사의 품질 하락에 한정되지 않는다. 평균적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적절하게 수집되고 분석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려워서 작성자의 의도가 수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강남준 1993; 이승선 2008; 황용석 2000). 기자 스스로가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설명 역시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에 기자들보다도 통계 리터러시가 낮은 보통의 수용자가 데이터를 포함한 기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편, 언론사와 외부 기관의 공모 관계에 의한 문제는 언론사와 정부, 기업 간의 공모적 이해에서 비롯된다. 학자들은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한 보도가 정부, 기업, 또는 사회단체 등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자료를 해석한다고 지적해왔다(강남준 1993; 이부일 외 2010; 황용석 2000). 이를테면, 최선열(1990)은 관료적 조직체들이 그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대중의 우호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 만들어내는 공식적인 발표와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언론이 뉴스 형식으로 이들의 홍보 활동을 돕는 편향적 보도를 ‘관료적 선전(bureaucratic propaganda)’이라 지칭했다. 황용석(2000)도 통계를 활용하는 정권이나 이익단체가 언론에 통계자료들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데이터를 가공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통계자료는 정확하고 타당하더라도 보도자료에 제시되는 통계는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이를 모두 담을 수 없다. 혹여 전체 통계를 입수하더라도 항상 마감 시간에 쫓기는 기자 처지에서는 이를 다 읽어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사의 논지에 부합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확대, 가공하여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론사는 제공자에 의해 걸러진 것 중에서 이해하거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데이터만 활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결국 데이터 제공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정일권 외 2018).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수용자가 뉴스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다. 질 낮은 보도에 대한 수용자의 지속적인 비판과 거부하는 기자와 언론사의 생산 활동에 중요한 유인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뉴스 수용자에게 나쁜 여론조사 보도를 걸러내고 좋은 보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뉴스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오래전에 시작되었음에도 선거 여론조사 문제를 리터러시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시도는 적었다. 앞서 지적한 선거 여론조

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두 측면에서의 리터러시 향상이 필요하다. 첫째는 어떤 뉴스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는 선택한 뉴스에 포함된 해석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이다.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 수용자의 얕은 전문지식이 리터러시 향상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게다가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가 없어서 합리적 판단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사 전체가 아니라 기사의 일부를 단서로 좋은 기사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실질적인 동시에 효과적으로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기사의 핵심은 제목에 담긴다. 따라서 우선 제목을 분석하여 좋은 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단서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에서는 여론조사 보도 기사의 제목을 유형화하고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 좋은 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관련 기사의 제목을 유형화했을 때 뉴스 품질이 높은 유형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우리 언론에서는 후보자 간 우열을 강조하는 경매중계형 보도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처럼 경매 보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1차적 해석 내용을 분석하여 좋은 기사를 찾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후보자 간 비교 분석 또는 후보자별 시계열적 분석 내용이 포함된 1차 해석 기사 중에서는 해석 내용이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고 그 중에서 일부는 수용자에게 그릇된 관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다. 이처럼 통계적 오류가 큰 기사를 쉽게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기사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고, 기사를 선별하여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 2]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관련 기사의 1차적 해석 내용을 통해 기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차적 해석은 열린 결론을 전제로 한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에 이르지만 모두 타당할 수도 있고 전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과정의 적절성과 결론의 논리성 그리고 주장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보통의 독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2차적 해석에 해당되는 기사 내용을 별도로 분석하여 두드러지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유형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서를 제시할 것이다. 즉, 해석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략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연구문제 3]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관련 보도 중 2차적 해석을 포함한 기사의 품질을 수용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도한 일간지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양적 내용분석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리 분석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는 빈도를 세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핵심 변수인 기사 제목의 특징과 기사 중 해석적 내용의 속성은 선행연구에서 유형화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귀납적으로 접근하였다. 즉, 연구진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논의를 통해 유형을 추출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수용자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분석 대상 기사의 선정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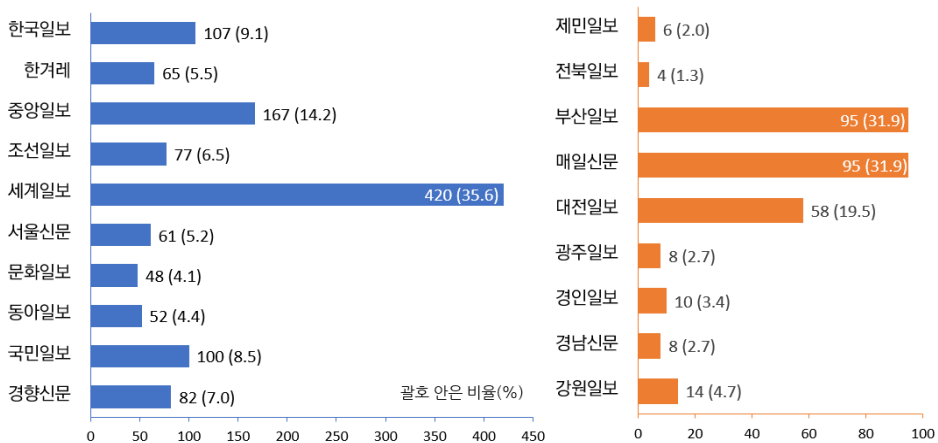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언론 보도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의 온라인 기사를 수집하였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사로 한정하였고, 빅카인즈(www.bigkinds.or.kr) 서비스를 이용하여 1월 1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약 두 달 사이에 보도된 기사를 검색하였다. 전국 일간지 10개 언론사 대상 “여론조사”라는 단어가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된 기사를 검색한 결과, 총 3,062건이 추출되었다. 이 중,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기사는 1,179건이었다. 지역 일간지 9곳도 빅카인즈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였고, 언론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로 제한하였다. 다만, 제주일보는 빅카인즈 서비스를 통해 기사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 대신 제민일보를 선택했다. 위와 동일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사는 총 834건, 이중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언급한 보도는 298건이었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1,477건의 기사를 67일의 분석 기간으로 나누면, 하루 평균 22건이라는 단순 평균이 산출된다.

10개의 전국 일간지 중에서는 세계일보가 가장 많이 보도했고, 다음으로 중앙일보, 한국일보 순이었다. 지역 일간지는 매일신문, 부산일보, 대전일보 세 언론사 보도량의 합이

지역 일간지 분석 대상 기사 중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그림 1〉 참조). 같은 날짜에 여러 조사 결과가 한 언론사에서 연이어 보도되었고, 같은 조사 결과가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다. 기사들은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었는데, 다수가 1건의 결과만을 보도하였고(72.5%), 2개의 조사를 보도한 경우는 15.0%, 나머지 기사들(12.5%)은 3건 이상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었다.

분석된 기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기본 요소로 모든 기사에서 발견되었는데 후보자별 지지율 결과 및 여론조사 관련 필수 보도 항목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 셋째, 성별·연령대·지역 등으로 구분된 하위 응답 집단별 분석 결과, 넷째, 조사에 포함된 부가적인 질문의 응답 결과,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기자나 전문가의 코멘트 또는 해석이다.

〈그림 1〉 언론사별 대선 여론조사 보도 건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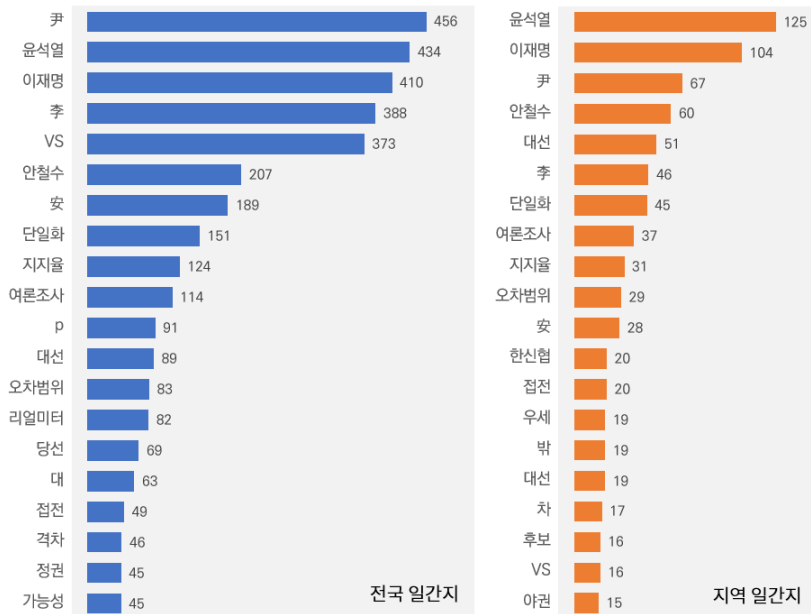
IV. 결과

1. 여론조사 보도 기사의 제목

기사의 품질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제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사 제목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뉴스 품질을 따져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목에 어떤 단어들(단어)이 주로 사용되었는지 분석했다.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빈도 순위 20위까지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후보자 이름과 이름의 한문 약자가 가장 많이 쓰였고, ‘단일화’, ‘지지율’, ‘오차범위’, ‘접전’ 등이 많이 쓰인 단어 순위에 올랐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외에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가 ‘안철수’인데 안철수 후보가 제목에 언급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거의 모두 단일화에 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 두 후보 간 대결 구도의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스트레이트형 기사인 경우에도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의 방향과 크기를 언급하고 후보자 간 차이에 대한 표현(‘접전’, ‘초박빙’, ‘초초박빙’)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제목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통해 대부분의 선거 여론조사 기사가 경마 보도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마 보도는 ‘나쁜’ 보도이기 때문에 배제해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수용자들이 소비할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거의 남지 않는다. 게다가 경마 보도가 선거와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고양하고 유권자 간 대화를 촉진하는 소재가 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을(Traugott and Lavrakas 2000)을 감안한다면, 경마 보도를 배제하는 것보다 품질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

<그림 2> 기사 제목에 쓰인 단어의 빈도 순위 20



런 이유에서 경마 보도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탐색해 보았다. 경마 보도 경향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단서는 지지율 수치다. 따라서 제목에 수치를 포함한 기사를 추출하여 유형화를 시도했다.

분석 대상 전국 일간지 기사 1,179개 중 682건(57.8%)의 기사, 지역 일간지 298건 중 145개(48.7%)의 기사 제목에 조사 결과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 결과 수치가 포함된 기사 제목들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대표적인 요인들이 조합된 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치 제목 기사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① 각 후보자의 지지율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다. 여기에 ② 조사기관명, ③ 지지율의 차이나 추세에 대한 해석(예: 초박빙, 오차범위 내, 급등, 역전), ④ 수치가 나타내는 조사 문항의 내용(예: 단일화 가정, 지지율, 당선 가능성), ⑤ 하위 집단의 결과 (예: 특정 인구 집단이나 응답 집단 수치), 그리고 ⑥ 조사 시점의 맥락(예: 단일화 결렬) 요소들 중 일부가 결합한 형태였다. 지지율 수치가 포함된 여론조사 기사 제목을 유형화한 결과와 각 유형의 예시는 <표 1>과 같다.

제목 유형 1과 유형 2의 경우 수치 위주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장 간명하고 손쉬운 제목이지만, 점수 대결 또는 순위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 유형 3은 수치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 보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대

<표 1> 여론조사 결과 보도 기사 중 지지율 수치가 포함된 제목의 유형

유형	기사 제목 예시
유형 1	① 지지율 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36%, 윤석열 26% 안철수 15%” (세계일보, 1/7) • 李 40.4% 尹 38.5% 安 8.2% (대전일보, 2/3) • 이재명 34% 윤석열 41% (조선일보, 2/19) • 윤석열 42.9% 이재명 38.7% 안철수 8.3% 심상정 3.2% (한국일보, 2/20)
유형 2	① 지지율 수치와 ②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BS] 이재명 37% 윤석열 28% 안철수 14% 심상정 3% (경향신문, 1/13) • 이재명 39.1% 윤석열 26.0% 안철수 10.6% [한국리서치] (중앙일보, 1/5) • 尹 41.4% VS 李 36.2% VS 安 9.6% [KSOI] (세계일보, 1/17) • 갤럽 조사, 이재명 34% vs 윤석열 41% (동아일보, 2/19)
유형 3	① 지지율 수치와 ③ 수치에 대한 해석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37% 윤석열 31% 안철수 17% 尹 安 상승세 (매일신문, 1/4) • 윤석열 반등세 尹 38.0% vs 李 35.3% 다시 초점전 (국민일보, 1/12) • “이재명 34% vs 윤석열 33% 초박빙 승부 안철수 17% 유지” (서울신문, 1/21) • 윤석열 43.8%, 이재명 33.8% 尹, 오차범위 밖 우세 (국민일보, 1/23) • 尹 43.8%-李 33.8% 지지율 두 자릿수 격차 安 11.6%[KSOI] (동아일보, 1/23) • 윤석열 43.5% 이재명 38.1% 안철수 7.8% 되돌아온 양강구도 (매일신문, 2/1) • [리얼미터] 윤석열 41.9%-이재명 40.5%, 좁아진 격차 (한겨레, 2/24)

유형	기사 제목 예시
유형 4	<p>④ 질문과 ① 응답 수치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 떠나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나? 이재명 49.1% 윤석열 40.5% (한국일보, 1/3) • 단일화 적합도 安 43.5% 尹 32.7% 국힘 내홍 책임은 尹 52.6% (매일신문, 1/6) • 야권 단일화 시 尹 49.2% 安 38.8%로, 李 모두 앞서 (대전일보, 2/9) • '윤석열, 능력 부족 60%... 이재명, 도덕성 부족 67%' [한국일보 여론조사] (한국일보, 2/21) • '당선 예상' 윤석열 52.6% VS 이재명 35.0% 정권 교체 58.3% VS 유지 37.3% [글로벌리서치] (세계일보, 2/22)
유형 5	<p>⑤ 하위 집단의 ① 응답 수치 (+2) (+3)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지지” 이재명 지지층 89.6% 윤석열 지지층 86.1% (부산일보, 1/24) • 이재명 36% 윤석열 48% 40대 뺀 전 연령대서 尹이 앞섰다 [리서치뷰] (중앙일보, 2/11) • '중도층' 윤석열 39% VS 이재명 32% [한국갤럽] (세계일보, 2/19) • '승부처' 서울 이재명 40.5% 윤석열 40.6%... '캐스팅보트' 대전 충청 세종은 (대전일보, 2/22) • 호남서 李 69%, TK서 尹 66% 양강 흔들리는 '뒷발' (서울신문, 3/1)
유형 6	<p>⑥ 조사 시점의 맥락과 ① 지지율 수치 (+2) (+3)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건희 이재명 낙취록 이후 첫 조사서 이재명 34% 윤석열 33% 초접전 (매일신문, 1/20) • 설 민심 보니 “윤석열 46%, 이재명 38% 안철수 8% 소폭 하락”(종합) (서울신문, 2/4) • 첫 TV토론 뒤 민심은 李 35.1% 尹 37.2% 安 8.4% 沈 2.2%[KSOI] (중앙일보, 2/6) • 李 40.4% 尹 43.5% '적폐수사' 발언 후 두 후보 차 좁혀졌다 [KSOI] (중앙일보, 2/14) • 단일화 결렬 뒤 李 34.1% 尹 44.1% '단일화 필요 없다' 51.2%[칸타코리아] (조선일보, 3/1)

결 구도(지지율 차이), 경마중계(등락 폭)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유형 4는 질문 내용과 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사 내용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유형 5는 하위 집단별 수치를 강조하는데, 이는 집단 간 대립이나 차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통계적 가정이 표본 크기에 근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위 집단 분석의 오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마지막 유형 6의 경우 조사 시점의 맥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형 4와 유사하게 수치의 의미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지만, 기자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통계 지식이 부족한 수용자가 제목만으로 뉴스 소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첫째 유형 5는 피해야 하며 둘째, 꼭 소비하고자 한다면 유형 4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뉴스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한다. 포털은 유사한 내용의 뉴스들을 묶음 형식으로 제시하는데, 이때 기사의 유형에 따라 선택한다면 수용자들은 전체를 다 비교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품질이 나은 뉴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2. 지지율에 대한 1차적 해석

[연구문제 2]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사 내용 중에서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1차적 해석은 조사 결과 수치에 대한 설명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사는 지지율에 덧붙여 후보자 간 비교에 대한 평가로 “앞서고 있다”, “박빙이다” 혹은 “지난 번 조사에 비해 상승/하락했다” 식으로 1차적 해석을 담고 있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지지율 결과 보도 시 이전 조사 결과를 언급하거나 그 비교 결과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이재명 39.1% · 윤석열 26.0% · 안철수 10.6% [한국리서치]—동아일보 1월 10일). 그리고 직전 결과와의 비교를 넘어 과거 여러 건의 조사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많게는 9개의 조사 결과를 한 기사에서 다룬 경우도 있었다(예: “이재명 36.2% 윤석열 41.4%…안철수 9.6% 다시 한자릿수 [KSQI]—중앙일보 1월 16일). 또한 비슷한 시점에 조사된 여러 결과를 비교하는 기사도 많았다(예: “[대선 여론조사] MBC 尹 37.1% 李 35.3…SBS 尹 35.0% 李 30.6% 7건 중 6건에서 尹 오차 범위 내 우세”—조선일보 2월 7일). 이처럼 지지율 수치의 변화 또는 후보자별 등락에 관한 추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일간지 기사 1,477건 중 822개로 약 56%에 해당하였다.

1차적 해석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위 집단들을 비교하고 수치에 ‘우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위 집단의 수치를 바탕으로 후보자 간 우열을 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는 통계적으로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할 때 전제되는 가정은 표본 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전체 표본 크기에 기반을 둔 통계적 가정을 표본 내 일부 집단의 결과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주목하고 싶으면 해당 집단을 모집단으로 산정하여 표집하고 조사해야 한다. 20대 남성의 지지율 순위가 궁금하면 20대 남성을 모집단 삼아 표본을 구성해야 한다. 실제로,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몇 차례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보도에서도 다시 집단을 세분화하여 비교한다. 이 또한 오류이다. 매일신문(1월 5일)의 “2030 조사서 이재명 33.4%로 1위...안철수 19.1% 윤석열 18.4%”, 조선일보(2월 6일)의 “李, 40대 · 사무직서 우세...尹, 20대 · 자영업자서 강세”와 같은 하위집단 결과를 유의미하다고 강조하는 보도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 외에도 지역별 지지율 수치에 통계적 의미를 두는 해석을 포함하는 기사도 많았다(예: “최대 유권자 집단 경기·50대서 상위 李, 캐스팅보트 서울·충청에 2060거머쥔 尹”—서울신문 2월 28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전체 기사 중 3분의 2가 넘는 비율(68%)은 해석을 최소화하고, 순전히 지지율 수치만 보도하거나(여러 결과의 수치를 단순 나열), 간단한 1차적 해석

(순위, 차이의 오차범위 이내 여부,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만을 제공하는 경우였다. 그리고 추세나 하위 집단들의 지지율을 화려한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면 정보가 풍부하고 정교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실제 그림이나 그래픽이 얼마나 정확하고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처럼 집단별 지지율 차이를 강조하는 보도는 통계적으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지역 간, 젠더 간 차이를 부각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지양되어야 한다.

[연구문제 2]에 관한 분석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수용자는 하위 집단의 수치에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여 후보자의 순위를 매기는 내용에는 애초부터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둘째, 만약, 특정 언론사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한다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배제하고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되 하위 집단의 수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수용자의 자세다.

3. 2차적 해석 보도

2차적 해석 보도는 지지율 등락의 원인 그리고 배경, 지지율에서 추출한 유권자의 바람과 같은 의미 부여를 포함한 기사다. 전체 기사 중 2차적 해석을 포함한 기사의 비율은 1차적 해석을 포함한 기사보다 낮았다(1/3 이하). 리터러시 관점에서 의미를 찾는 분석을 위해 이 기사들을 따옴표 해석, 정치 회의감 강화, 그리고 혼수형 해석으로 유형화했다.

1) 따옴표 해석

해석이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자의 1차적 해석에 덧붙여 제삼자에게 2차적 해석을 의존하거나, 기자의 2차적 해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삼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이 많았다. 아래 두 사례는 전형적인 구성으로, 보도한 조사 결과에서 지지율의 차이나 추세, 집단 간 차이 등에 관한 기자의 분석(1차적 해석)에 더하여 이러한 차이나 변화가 일어난 원인(2차적 해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각각 여론조사기관과 정치학자의 말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물론, 따옴표 해석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 코멘트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인용된 정보원들은 주로 조사기관 종사자, 정치학자, 평론가, 정치인 등이었는데, 조사 방법 및 해석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통계학자 또는 사회과학자는 거의 없었다. 또한 A는 이렇게 말하고 B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C는 이렇게 말했다는 식의

보도는 수용자가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품질이 낮은 보도로 봐야 한다. 즉 리터러시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설명이 없이 직접 인용만 나열된 보도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낫다.

지지도 윤석열, 당선가능성 이재명 오차범위 밖 우세...해석은 (대전일보, 1/17)

지난 주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는데, 한 주만에 두 후보의 자리가 뒤바뀐 것이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봉합과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등 이슈가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윤 후보의 경우 특히, 20대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지난 주 25.9%에서 47.4%로 21.5%포인트 올랐다. 30대에서도 26.3%에서 35.8%로 9.5%포인트 상승했다. ... 리얼미터는 "이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은 이 후보 관련 추세 이탈까지 벌어진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지도는 윤 후보가 우세로 나타난 것에 대해선 "윤 후보는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하며 지지율이 상승 반전했다"고 이어 설명했다.

정권교체론 47.6%... "지지층 결집 가속" [국민 여론조사] (국민일보, 2/7)

정권교체 여론은 국민일보의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6~7일 실시)의 55.1%보다 7.5% 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정권재창출 여론은 같은 직전 조사(37.8%)보다 3.4% 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대선이 임박하면서 양측 진영이 결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정권교체 여론이 하락한 이유는 어차피 물러날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과거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또 미래 전망 차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정권재창출 여론이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제대로 주지 못한 실망감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정권재창출 여론이 높아진 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야권 후보가 기대한 만큼의 국정운영 자질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정권교체 여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문 대통령에 반대하며 이탈했던 진보성향 유권자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결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2) 정치적 회의감 강화 해석

해석 보도의 다음 유형은 선거, 나아가서는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해석이다. 이런 기사들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데 첫 번째는 선거를 일종의 게임으로 간주하고 유권자를 게임의 관전자로 다루고 있다. 아래 사례처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전략, 또는 특정한 활동을 취재하고 그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를 연결하는 기사들이 해당한다. 여기서 유권자는 주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주체가 아니다. 이런 해석을 보다 보면,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지닌 공직자가 아니라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개인 이익 추구 전술가로 느껴진다. 이런 사람 중 누군가를 선출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유권자가 가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청년 월세 부담 낮추겠다”...2030 공약 나선 李 (중앙일보, 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대선에서 최대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를 향한 구애를 이어갔다. ...이 후보가 연일 청년층에 공들이는 것은 이들의 표심 향배가 대선 승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대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출렁이는 부동(浮動)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조사 결과,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0대에서는 70.3%, 30대에서는 51.7%에 달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윤석열 “자영업자 24시간 영업·방역패스 완전 철폐” (경향신문, 2/2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이라고 적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잡으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허용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층의 이탈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 공방에서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지원을 막았다는 여당 측 주장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후보는 지지율 37%를 기록해 이재명 후보(38%)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정치적 회의감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식은 유권자 개인의 투표행위의 효능감을 저하하

거나 유권자를 비이성적인 존재로 전제하는 보도다. 아래 세계일보 기사는 부동산의 비율, 후보 결정 시점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함의하는 바를 찾으려는 시도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떤 큰 이슈가 터지는 지 또는 정보나 토론, 소문이 중요하다”로 귀결되는 것은 유권자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 혹은 투표 결과는 몰이성적 행동의 반영이라는 가정을 담고 있다. 기사가 주목하는 부동산 또는 중도층을 포함하여 유권자를 기사의 청중이라 여겼다면, 이들이 마음을 정하고 투표 결심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나,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전달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리터러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사를 읽고 수용자가 정치 혹은 선거 참여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느낌을 준다면 이는 좋은 기사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국회 혹은 대통령실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기사가 좋은 기사다. 따라서 정치적 회의감이 드는 기사를 계속해서 게재하는 언론사는 구독하지 않는 것이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3주 ‘부동층’ 행배가 대선 승패 결정 짓는다 (세계일보, 2/16)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박빙 싸움에서 판을 뒤흔들거나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터진다면 대선 판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김봉선 메타보이스 대표는 “1달 이내에 들어와서 결정하는 임박 결정자는 대부분 대선에서 3분의1 가량을 차지했고 지금도 비슷하다”면서도 “예전과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2030과 여성에 몰려 있다. 갑자기 임박해서 큰 이슈가 터지고 이를 청년과 여성 등 부동층이 받게될 경우 거기서 승패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이제부터는 미결정자들이 결정하는 시기에 돌입했다. 지금 나오는 정보와 토론, 소문과 언론의 동향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조선일보 기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후보 교체론’이라는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보도에서는 후보 교체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나열하고 있고, 이어서 후보 교체가 불가능한 이유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면, ‘후보 교체를 고려해야 할 만큼 지금의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유권자의 관심과 호감을 얻기 위해 후보자가 노력해야 할 지점, 교체를 주장하는 유권자에게

생각해 볼거리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정치 무관심과 혐오감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관한 해석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아무튼, 주말 역대급 비호감 대선...D-67에 흘러나오는 '후보 교체론' 가능할까? (조선일보, 1/1)
'이재명도 윤석열도 싫다! 민심은 후보 교체, 정치 교체!'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이른바 '후보 교체론'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후보 교체 필요성'을 묻는 질문이 등장했다. 한길리서치·아주경제가 12월 25~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필요 없다'는 36.4%에 그쳤다. 후보 교체론이 표면화되면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그래서 후보 교체는 가능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후보자의 사망이나 소속 정당의 제명과 같은 이례적 상황이 생기는 경우라면 후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3) 혼수 저널리즘

특정 후보자를 주제로 삼은 2차적 해석은 지지율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 평가하거나 지지율을 올릴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런 해석은 기자 개인의 진단이거나 전문가를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되기도 했다. 기사의 수용자는 대부분 유권자인데 이 보도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진영을 위한 것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조언이 대부분이다. 이런 기사는 정치 보도 중에서 '혼수 저널리즘'이라고 비판받았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아래 기사에서는 부가 문항들을 자체 기획하여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문항 간 교차 분석을 시행하여 나름대로 통찰력 있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후보자 처지에서의 진단("이재명의 '이탈 민주당', 윤석열의 '뉴 보수' 잡기가 중요함")에만 주로 할애되어, 독자에게 의미 있고 효과적인 처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후보자에게 "잘 해봐라" 하는 수준의 혼수에 그치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유권자 집단을 진영에 따라 양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사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리터러시를 향상할 수 있다. 반면에 지지자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기사는 선택함으로써 리터러시를 향상할 수 있다.

대선 승부, 이재명의 '이탈 민주당'·윤석열의 '뉴 보수' 잡기에 달렸다 (한국일보, 1/3)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서 이른바 '이탈 민주당'과 '뉴 보수'로 분류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안에 따라 진보·보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을 잡기 위해선 여야가 진영을 뛰어넘는 중원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20년 총선 이후 민주당을 떠난 '이탈 진보'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같은 시기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된 '뉴 보수'를 확실하게 붙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후보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배경에는 이탈 민주당이 있다. 잔류 민주당 응답자 중 83.9%가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며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탈 민주당 응답자 중 57.6%는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 민주당 중 67.2%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늘었으나, 새롭게 합류한 지지자들이 윤 후보가 '정권 심판의 책임자' 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 보수 가운데 63.8%만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 때부터 계속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잔류 보수의 윤 후보 지지율(74.8%)보다 11.0%포인트 낮다. …그만큼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다. …이에 윤 후보는 전통 보수뿐 아니라 뉴 보수를 안정적으로 결집하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4) 대안적 해석 보도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볼 때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보도 중 바람직한 사례가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보도 예시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모두 제각기 다른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2>에 나열하고 있는 기사들은 단점이 없지는 않지만,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더 큰 기사로 평가했다. 이런 기사들은 모두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주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을 시도한다. 이런 기사를 선택하는 수용자는 리터러시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의 부산일보(1/2) 기사는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의 바람과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캠페인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신문(1/21) 기사는 20대 유권자들의 바람을 후보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근거로 이들 연령대의 과거 투표율과 최근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공하고 있다. 한겨레(1/27) 기사는 선두권을 형성한 두 후보의 공약이 충돌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와 유지에 관한 내용을 여론조사 결과와 연관시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3/3) 기사는 TV토론이라는 중요한 선거 이벤트에 대한 후보자

별 평가를 여론조사 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모두 여론조사 결과에 담긴 유권자의 바람을 후보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표 2〉 대안적 해석 기사의 사례

언론사	날짜	기사 제목
부산일보	1월 2일	“정권 교체는 돼야 하는데 윤석열 선뜻 뽑기는...”
서울신문	1월 21일	‘박탈감 폭발’ 뭉치는 이대남... ‘페미 반작용’ 흩어진 이대녀
한겨레	1월 27일	[뉴스AS] 국민 과반이 ‘여가부 폐지’ 찬성? 2주간 여론조사 뜯어봤다
국민일보	3월 3일	응답자 87.1% “TV토론 이후 지지후보 안 바뀌었다”

V. 논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방법과 조사 내용 공포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도 뒤따르게 되었다.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제정하고 기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해진 규정을 다 따르기 힘든 사정이 있기에 미흡한 품질의 기사가 계속 보도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맥락에서 미흡한 혹은 부실한 선거 여론조사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사의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수용 과정에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유권자 개개인이 뉴스 리터러시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수용자의 현명한 선택이 뉴스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이슈는 우선 전문 지식인 통계적 정보에 대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제, 뉴스 포털과 같은 변화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쉽게 수용자의 시선을 끌고 흥미를 자극하는 경매중계형 보도의 문제, 그리고 정치 보도에 항상 따라다니는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 수용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기사가 가지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뉴스 리터러시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복잡한 통계적 정보나 저널리즘의 문제에 대한 리터러시를 짧은 시간 내에 높이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 또한 인정

한다. 따라서 수용자 개인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좋은 기사를 선별해 내는 것이 힘들다면 기사에 포함된 몇 가지 단서를 통해 문제점이 많은 기사를 걸러내는 것만이라도 질 낮은 보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한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국 일간지 및 지역 일간지 온라인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보도된 기사로 한정하였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는 전국 일간지 10개사에서 1,179건, 지역 일간지 9개사에서 298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는 항목별 빈도수를 비교하는 전형적인 양적 내용분석 대신 추출된 기사를 먼저 읽고 기사의 품질을 평가한 뒤 그러한 품질 평가에 근거가 되는 단서를 추출하는 귀납적인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기사 제목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제목에서 추출된 단서로 리더십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다. 디지털 공간에서 전문 기자가 아닌 보통의 이용자도 직접 뉴스를 작성하거나 복사한 뉴스를 게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너무 많아서 어떻게 걸러낼지를 걱정하는 시대다. 같은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기사를 10개 이상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중 나은 기사를 골라내는 능력이다. 이런 목적에서 기사 제목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여론조사 보도 기사의 제목에는 한글, 한자, 영어, 특수문자들이 다채롭게 사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수치의 차이, 순위, 등락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으로 '순위 싸움 중계'라는 여론조사 보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사 제목에 쓰인 단어 중에는 두 후보자 이름과 약자, 'VS', '접전', '격차', 그리고 '단일화'와 같은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는 두 후보자 간 대결이 초점임을 함축한다. 특히, 기사 제목의 절반 이상이 지지율 수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지지율 수치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쉽게 기사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지율 수치를 제목으로 만들고 항목에 따른 결과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보도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식이다. 이는 기사작성의 용이성에 더하여 여론조사 보도가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방어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뉴스 제목이 주로 지지율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수치 제목 기사들의 유형을 구분해 보았다. 대결 구도나 등락의 추세만을 강조하는 기사보다는 수치가 나타내는 조사 항목이 제시되는 경우,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쉽고, 정보적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이나 세대와 같은 하위 집단의 수치를 강조

하는 보도는 통계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기에 수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기사에 1차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을 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1차적 해석은 조사 결과의 수치와 후보자 순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경매중계형 보도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보도 방식을 포기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후보자 간 우열과 지지율 비교가 수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분명 선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수치에 대한 통계적 해석이 틀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리터러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복잡한 통계적 지식이 필요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명확한 문제를 지닌 분석 내용을 걸러내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1차적 해석을 포함한 기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여러 조사의 수치를 비교하고, 한 조사에서도 하위 집단 수치를 비교하여 우열을 가르는 보도였다. 우선, 비슷한 시점에 시행된 여러 조사를 비교하고, 최근 발표된 결과를 과거 조사들의 수치와 함께 그래프로 제시하는 식으로 서로 다른 기관 또는 시점에 시행된 조사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비교는 주목도를 높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옳바르지 않은 접근이다. 다른 시점의 다른 집단의 결과, 게다가 질문 문항도 통일되지 않고, 조사 방식도 다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갖는 가장 눈에 띄는 문제라고 하면 인구통계학적 집단, 특히 세대·지역·성별 등 집단 간 차이나 갈등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조사 표본을 구성하는 하위 집단 간의 지지율 결과를 비교하거나 해석할 때 표본의 오차범위를 적용하여 해석하는 오류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사 중에는 전체 지지율 결과의 차이를 해석할 때 오차범위를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사후적으로 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여론조사 보도의 오류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인들의 통계적 리터러시가 증가했으며, 선관위에서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이제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기본적으로 함께 보도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표본의 오차범위를 하위 집단의 지지율 수치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사례를 자주 발견하였는데, 이는 오차범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앞서 지적했듯 지역이나 성별 같은 하위 표본의 비교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를 기준으로 산출된 오차범위를 적용할 수 없다. 과거에는 오차범위를 적용하여 해석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오차범위를 잘못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었다. 이런 기사는 배제해야 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2차적 해석 기사에 관한 것이다. 2차적 해석은 결과의 원인에 대한 설명 혹은 결과를 통해 유권자의 바람을 읽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열린 결론일 수밖에 없다. 즉,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지지만 그 모든 결과가 타당할 수 있고 아무것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의 논리성과 근거의 적합성을 판단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 수용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해석 품질의 순위를 대략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분석 결과, 2차적 해석에 있어 세 가지 문제 유형이 도출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보도가 가지는 문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활용하여 중요한 화두를 찾아내고 분석하여 설명해 주는 대신 주관적 감상평에 지나지 않는 따옴표 해석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 정치와 선거에 대한 회의감을 조장한다는 점, 그리고 선거를 후보자 간 대결로 바라보고 득표 기술에 대한 훈수만 두느라 유권자들을 위해 정치적 참여의 장을 넓히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옴표 해석은 2차적 해석의 흔한 형식이었고, 그 내용은 대부분 후보자를 향한 훈수였으며, 훈수의 내용은 다시 선거나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일으키는 방향이었다. 한편, 비록 소수지만 대안적 해석을 시도하는 보도도 있었다.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유권자가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인이 유권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소수였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보도는 많은 기사가 지지율 수치만 단순하게 제시하고, 최소화된 1차적 해석, 게다가 2차적 해석도 게으른 방식의 인용이 다수였다. 이는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기사작성에 드는 노력도 최소화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전문가 인용이 기자의 해석을 단순하게 반복하거나 바꿔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기자의 해석이 유권자 독자를 향하고 정치와 선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보도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이 편향성의 논란을 피하고자 숫자 보도에만 치중하는 것도, 해석의 내용이나 방향이 치우친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선거에 대한 효능감을 약화하거나 정치 참여에 대한 회의감을 강화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와 소통의 장을 넓히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을 뉴스 리터러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사들이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집된 것은 아니며 빅카인즈 서비스를 통해 추출했을 때 놓치는 기사

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일반적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는 자칫 수치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전형적인 양적 내용분석 방법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기사를 걸러내고 비판적으로 내용을 수용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보도 관련 리터러시를 훈련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는 실험 연구를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기사를 선택하고 주의해서 읽어 낸다면 수용자가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기사,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기사, 일부러 찾아서 읽고 싶어 하는 기사가 구분된다면 현장에서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기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강남준. 1993. “공직자 재산공개 보도과정에서 나타난 통계수치의 문제점.” 『저널리즘 비평』 11, 47-52.
- 권오근. 2006.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 『관훈저널』100, 158-164.
- 권혁남. 1991. “선거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13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26, 5-44.
- 권혁남. 2002. “선거 보도의 관행과 문제점.” 『언론중재』 84, 5-17.
- 김경모 · 김시현 · 송현진. 2010.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서 방법론 문제와 부정적 보도 경향의 관계: 주요 일간지의 16-18대 국회의원 선거기사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0-3, 81-124.
- 김선호 · 백영민 · 장경은. 2021. 『선거와 미디어: 유권자의 관점에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연수 · 김지현 · 정일권. 2007. “2007 대선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특성—신문과 방송 보도의 내용분석과 응답자 서베이 조사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7, 83-120.
- 김용호 · 남연주 · 정경순. 2015.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의 선거여론조사 매체공표 효과론은 실증적 근거가 있는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7, 39-80.
- 김위근. 2021. “선거 보도 및 선거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시민 인식.” 『미디어이슈』 7-2, <https://www.kpf.or.kr/front/research/issueListPage.do>(검색일: 2023.2.15).
- 박현진 · 정일권. 2018.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효과: 수치 위주 기술형 대 분석—설명형 보도의 비교.”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2-3, 4-35.
- 송병권. 2019. “여론조사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매체의 정치적 편향: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4, 69-93.
-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2. “선거기사 심의기준 및 대표사례.” <https://www.pac.or.kr/kor/pages/?p=16>(검색일: 2023.2.15).
- 양승찬. 2002.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선거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서울 7월.
- 양승찬. 2007.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과 그 보도에 대한 이슈 고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3-1, 83-119.
- 이강형. 2002. “유권자의 정치후보에 대한 감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5, 73-104.
- 이두원. 1996. “선거보도의 방송언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TV 뉴스의 정보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정책포럼자료집』 33-46.
- 이부일 · 남궁현숙 · 박희창 · 신지은 · 이석훈. 2010. “국가통계의 언론보도 사례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4B, 2097-2104.
- 이승선. 2008. “한국 신문의 통계그래픽 오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8-2, 307-348.

- 이완수·노성중. 2011. “경기 국면에 따른 경제커뮤니케이션 효과의 비대칭성: 경제보도, 주가, 소비행위 간 효과의 위계, 속도, 강도에 관한 시계열 분석.” 『한국방송학보』 25-3. 302-348.
- 이정훈·이두황. 2013. “뉴스 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의 뉴스콘텐츠 이용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대 뉴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8. 180-190.
- 정일권. 2014. “선거여론조사 개선 방법에 대한 보도자와 조사자의 의견 차이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5-4. 61-94.
- 정일권. 2017.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통한 언론의 상관조정 기능 강화.” 『커뮤니케이션 이론』 13-4. 5-39.
- 정일권·김상연. 2021. “해석적 선거 여론조사 보도: 기사 작성과 취재 실천 방안.” 『방송문화연구』 33-2. 9-46.
- 정일권·장병희·남상현. 2014. “선거여론조사 방송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상파와 종편의 제18대 대선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8-5. 150-196.
- 정일권·조윤경·유경한. 2018. “공공 데이터 활용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산자-이용자-전문가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2-4. 146-18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여론조사결과 현황.” URL: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list.do?menuNo=200467>(검색일: 2023.2.15).
- 최선열. 1990. “여론조사 보도를 믿지 못할 까닭.” 『저널리즘 비평』 1. 50-55.
- 황용석. 2000. 『통계보도 길잡이』. 서울: 한국언론재단.
- Ansolabehere, Stephen and Iyengar, Shanto. 1994. “Of Horseshoes and Horse Races: Experimental Studies of the Impact of Poll Results on Electoral Behavior.” *Political Communication* 11, No.4. 413-430.
- BBC. 2019. “Guidance: Opinion Polls, Surveys, Questionnaires, Votes and ‘Straw Polls.’” URL: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ance/surveys>(검색일: 2023.2.15).
- Beckers, Kathleen. 2021. “‘According to the Polls...’ Opinion Poll Coverage in Network Evening News during the 2020 US Election Campaig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3, No.4. 1050-1061.
- Bhatti, Yosef and Pedersen, Rasmus Tue. 2016. “News Reporting of Opinion Polls: Journalism and Statistical Nois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8, No.1. 129-141.
- Broh, C. Anthony. 1980. “Horse-race Journalism: Reporting the Polls in the 1976 Presidential Elec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4, No.4. 514-529.
- Cappella, Joseph N. and Jamieson, Kathleen Hall. 1997.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the Public G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ia, Stella C. and Chang, Tsan-Kuo. 2017. “Not My Horse: Voter Preferences, Media Sources, and Hostile Poll Reports in Election Campaigns.” *International Journal of*

- Public Opinion Research* 29, No.1. 23-45.
- Daoust, Jean-Francois. Durand, Claire and Blais, Andre. 2020. "Are Pre-Election Polls More Helpful Than Harmful? Evidence From the Canadian Case." *Canadian Public Policy* 46, No.1. 175-186.
- de Vreese, Claes H. and Semetko, Holli A. 2002. "Public Perception of Polls and Support for Restrictions on the Publication of Polls: Denmark's 2000 Euro Referendum."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 No.4. 367-390.
- Falasca, Kajsa. 2014. "Political News Journalism: Mediatization Across Three News Reporting Context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9, No.5. 583-597.
- Fink, Katherine and Schudson, Michael. 2014. "The Rise of Contextual Journalism, 1950s-2000s." *Journalism* 15, No.1. 3-20.
- Gallup, George. 1978. *The 1972-77 Gallup Poll: Public Opin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박무익(역). 2002. 『갤럽의 여론조사』.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Howard, Alexander B. 2014. *The Art and Science of Data-Driven Journ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김익현(역). 2015. 『데이터 저널리즘: 스토리텔링의 과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Iyengar, Shanto. Norpoth, Helmut and Hahn, Kyu S. 2004. "Consumer Demand for Election News: The Horserace Sells." *Journal of Politics* 66, No.1. 157-75.
- Kim, Jibum, Gershenson, Carl, Glaser, Patrick and Smith, Tom W. 2011. "The Polls-Trends: Trends in Surveys on Surveys." *Public Opinion Quarterly* 75, No.1. 165-191.
- Larson, Stephanie G. 1999. "Public Opinion in Television Election News: Beyond Polls." *Political Communication* 16, No.2. 133-145.
- Lavrakas, Paul J. and Traugott, Michael W. 2000. "Election Polling in the Twenty First Centur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olls, the News Media, and Democracy*. Paul J. Lavrakas and Michael W. Traugott, eds. 162-181. New York: Chatham House.
- Meyer, Philip. 1993. "The Media Reformation: Giving the Agenda Back to the People." *The Elections of 1992*, ed. Michael Nelson, 89-108. Washington DC: CQ Press.
- Meyer, Philip and Potter, Deborah. 1998. "Preelection Polls and Issue Knowledge in the 1996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3, No.4. 35-43.
- Meyer, Philip and Potter, Deborah. 2000. "Hidden Value: Polls and Public Journalism." *Election Polls, the News Media, and Democracy*. Paul J. Lavrakas and Michael W. Traugott, eds. 113-141. New York: Chatham House.
- Mutz, Diana C. 1995. "Effects of Horse-Race Coverage on Campaign Coffers: Strategic Contributing in Presidential Primaries." *Journal of Politics* 57, No.4. 1015-1042.

- Neuman, W. Russell. 1996. "Political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6, No.1. 9-21.
- Patterson, Thomas E. 1980. *The Mass Media Election*. New York: Praeger.
- Patterson, Thomas E. 1993. *Out of Order*. New York: Knopf.
- Patterson, Thomas E. 2005. "Of Polls, Mountains: US Journalists and Their Use of Election Surveys." *Public Opinion Quarterly* 69, No.5. 716-724.
- Price, Vincent and Stroud, Natalie J. 2006. "Public Attitudes Toward Polls: Evidence From the 2000 U.S. Presidential El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 No.4. 393-421.
- Rosenstiel, Tom. 2005. "Political Polling and the New Media Culture: A Case of More Being Less." *Public Opinion Quarterly* 69, No.5. 698-713.
- Searles, Kathleen, Ginn, Martha H. and Nickens, Jonathan. 2016. "For Whom the Poll Airs: Comparing Poll Results to Television Poll Coverage." *Public Opinion Quarterly* 80, No.4. 943-963.
- Stephens, Mitchell. 2014. *Beyond News: The Future of Jour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off, Benjamin. 2019. "The 'Nate Silver Effect' on Political Journalism: Gatecrashers, Gatekeepers, and Changing Newsroom Practices Around Coverage of Public Opinion Polls." *Journalism* 20, No.7. 873-889.
- Traugott, Michael W. and Lavrakas, Paul J. 2000. *The Voter's Guide to Election Polls*. New York, NY: Chatham House Publishers.
- Zhao, Xinshu and Bleske, Glen L. 1998. "Horse-Race Polls and Audience Issu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3, No.4. 13-34.

[Abstract]

News Coverage of Polls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Campaign in Korea: A News Literacy Approach

Jeong, Irkwon |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Jin, Borae | Assistant Professor, Joongbu University

During the election period, numerous news articles report the results of surveys on voting intention and opinion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polls coverage and provide guidelines to help news audience evaluate the quality of such news. Thus, we analyzed the contents of 1,477 online news items from 19 daily newspapers published in about two months leading up to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Problems previously pointed out such as ignorance of the margin of error and failure to disclose important poll information have largely been resolved. However, most new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horse-race coverage, focusing on the result figures and rankings only. Otherwise, they minimized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results. In case of interpretive news articles, we identified three features: quotes from third-parties, skepticism about politics and elections, and advice to candidates not voters. Only a few articles provided insightful analysis of the poll results, exploring important contextual factors and underlying political issues. We believe these findings highlight variations in news quality regarding their ability to engage audiences and foster thei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politics through the provision of poll results and their implications. Therefore, we have provided guidelines to enhance news literacy in selecting and evaluating news coverage of polls, which we hope will prove useful for both audiences and journalists.

■ Keyword: News, literacy, election, journalism, opinion polls, horse-race coverage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제2조(『선거연구』의 발행) ① 『선거연구』는 정치제도 선진화에 필요한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관련 학술연구논문을 수집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8. 11. 30.〉

② 『선거연구』는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 연 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③ 발행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편집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6. 12. 13〉

④ 『선거연구』는 종이 도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제목변경 2018. 11. 30.]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편집위원회 설치)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선거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30.〉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7., 2018. 11. 30.〉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거연수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6. 12. 13, 2018. 11. 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연구원

3. 그 밖에 선거·정치제도에 관한 연구업적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편집위원회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연수원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6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8. 11. 30.>

1.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2. 법학·정치학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또는 선거연수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선거연구』발행업무담당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 11. 30.>

② 편집위원회는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 등에 관하여 게재 여부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8. 11. 30.>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급) 편집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작성 및 제출

제7조(논문독창성)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제8조(논문의 저작권재산권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한 경우 그 논문의 저작권재산권(「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8.]

제9조(논문 공모 등) 선거연수원장은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하거나 특정인에 의뢰하여 논문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② 논문작성 및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1. 30.>

제4장 심 사

제10조(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각 논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특정인에 의뢰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등 비공개) ① 논문 심사시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제출자의 이름을, 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한다.

② 논문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1. 논문체계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논문구성의 논리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참고문헌과 인용의 적절성

제13조(심사결과 보고 및 게재여부 결정) ① 심사위원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게재 :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
3. 수정 후 재심 : 주요 논지와 관련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때 <개정 2022. 1. 28.>
4. 게재 불가 : 전면적인 수정이 없이는 게재가 불가능할 때

②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결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일정상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2022. 1. 28.>

③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논문제출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위원장이 검토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④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논문은 논문제출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

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

제14조(결정결과 통보 등)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30.>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논문제출자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 11. 30.>

[제목변경 2018. 11. 30.]

제5장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삭제 <2018. 11. 30.>

제6장 보칙

제18조(비밀유지의무 등)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간사는 논문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논문심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연구윤리) ① 『선거연구』논문제출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제출, 논문심사 및 결정에 있어서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장이 정하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② 삭제 <2018. 11. 30.>

[제목변경 2018. 11. 30.]

제20조(위임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거연구』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연수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기관지편집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01호, 2012.12.21>(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중 “법제기획관”을 각각 “선거정책실장”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 〈제414호, 2014. 1.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44호, 2016.12.1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선거정책실장”을 “선거연수원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선거정책실장”을 “선거연수원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 〈제472호, 2018. 11. 30.〉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0호, 2022. 1.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선거연구』에 제출한 논문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 금지) ① 논문제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3.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중복게재신청”이란 자신의 논문이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된 사실을 숨기고 『선거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논문제출자는 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논문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이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제출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성별, 연령, 소속 기관, 개인적인 친분 등을 떠나 심사기준과 학문적 평가에 따라 제출된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제출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을 심사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심사 중인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행위
3.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그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연구』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보고 또는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결정 통보 등) ① 편집위원회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 그 사실을 해당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통보에 이의가 있는 논문제출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중 3인을 지정하여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제재)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논문제출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거연구』 논문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

2. 논문게재 이후 연구부정행위로 결정을 받은 논문은 『선거연구』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되며, 게재취소 사실을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이미 지급된 원고료 등을 환수한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편집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작성 요령

I. 원고의 길이

1. 원고의 전체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한 200매를 넘지 못한다.
2.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 소속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3.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명, 소속을 포함하여 200단어를 넘지 못한다.

II. 원고의 구성

1. 원고는 표지, 국문 및 영문(로마자)의 제목, 저자, 국문 및 영문 요약, 주제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논문명(제목), 저자, 초록, 주제어의 경우 반드시 국문과 외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되, 외국어 표기는 로마자 표기는 필수로 하며, 논문명과 저자명을 2종 이상의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2. 표지는 논문의 제목과 저자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는다(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2, 3), (4), 가), (나), i)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4. 인용저서나 논문은 본문 가운데 [저자 연도, (필요한 경우) 쪽수]의 형식을 사용한다.
5.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6.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7. 표와 그림은 본문 내 해당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 후

기재한다.

8. 원고 작성의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글꼴: 제목(굴림), 요약(중고딕), 장(견명조), 절(굴림), 항(굴림), 목(굴림), 본문(신명조), 참고문헌(견명조)
- 2) 글자크기: 제목 20, 요약 9.5, 장 15, 절 15, 항 13, 목 10.5, 본문 10, 참고문헌 10(장평 100, 자간 0)
- 3) 편집모양: 위쪽 20, 아래쪽 20,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2, 꼬리말 12, 제본 0
- 4) 문단모양: 왼쪽 0, 오른쪽 0, 줄간격 160, 문단 위 0, 문단 아래 0, 들여쓰기 3,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방식 0

III. 출전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은 성명), 출판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2020)은
 - 2) 단 외국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2020)는
 - 3)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명)과 출판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2020), (Moore 2020)
 - 4) 면수는 필요한 경우 출판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 2020, 22)
 - 5)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를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 2020)

- 6)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홍길동 2020, 18; 허생 2020, 46)
- 7) 대법원 판결의 경우 예) 대법원 2019.12.25.선고.○○다○○판결(결정)
- 8) 헌법재판소 판결은 예) 헌재 2019.12.25.2005헌바○결정

IV.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로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 3) 각 문헌의 첫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hanging indentation).
 - 가. 저서
 김용호. 2001. 『한국 정당정치 이해』. 서울: 나남출판.
 Rohde, David W. 1991. *Parties and Leaders in the Postreform Hou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나. 학술지 논문, 기명 기사
 정진민. 2000. “1980년대 이후 미국 정당정치 변화: 정당일체감과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1. 237-254.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 No.1. 32-65.
 - 다.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1988.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라. 학위논문

홍길동. 1995.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마.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2-264. 서울: 호박사.

Nie, Norman H. Sidney Verba, and John R. Petrocik. 1993. “The Decline of Partisanship.” *Classics in Voting Behavior*.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siberg, ed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9. 서울: 집현연구소.

바. 인터넷 자료이용

(1)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일자)순으로 한다.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2012.2.5)

(2)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2012.2.5). (1/10 Bar).

5.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있는 학술지 논문의 경우 DOI 기재

V. 기타사항

1.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되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2.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처음에 한하여 한글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3. 외국인명은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며 처음에 한하여 한글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애덤 스미스(Adam Smith)
4. 공모 논문은 심사를 통해 우리위원회가 발간하는 『선거연구』에 게재 예정이므로
 - 1)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2) 『선거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재산권 양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선 협의한다.

편집위원회(위원장 이하 가나다순)

- 위원장: 이현출 건국대학교 교수
- 위 원: 강신구 아주대학교 교수
김명정 강원대학교 교수
김주희 부경대학교 교수
박상철 영남대학교 교수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이상명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소영 부산대학교 교수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
차재권 부경대학교 교수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본지에 실린 논문에 제시된 논지와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선거연구 (2023년 통권 제18호)

인 쇄 | 2023년 5월 25일
발 행 | 2023년 5월 31일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전 화 | (02)503-1114
인쇄처 | 도서출판 오름 (oruem9123@naver.com)

ISSN 2287-5212(Print)
ISSN 2765-3129(Online)

(비매품)